

[독립영화인 워크숍 자료집]

독립영화인 워크숍
『신자유주의와 독립영화』

*미친 신자유주의에 맞서 독립영화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일 시: 4월 12일(수) 4시
- 장 소: 미디액트 대강의실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인 워크숍 <신자유주의와 독립영화>
미친 신자유주의에 맞서 독립영화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획의도]

신자유주의, 스크린쿼터, FTA, 새만금, 평택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한국사회는 초국적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개방화 공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점차 수위를 높여가던 사회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해있고, 사회 곳곳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라는 정체모를 괴물의 출몰은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악몽이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87년 이후 점진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거나 더욱 악화되어 가는 현실사회의 모순 속에서 독립영화진영은 어떻게 자기의 실천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독립영화]워크숍을 통해 독립영화 진영의 진보적인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화영역에서 특히 영화문화 다양성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실천프로그램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독립영화진영은 어떤 실천을 조직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워크숍 내용]

1부: 정세와 쟁점

기조발제/사회

신자유주의가 (독립)영화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훼손 하는가_원승환(한독협 사무국장)

발제

신자유주의,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_이해영(한미FTA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국제관계학))

신자유주의와 스크린쿼터 투쟁에 관하여_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2부: 실천

사회_김화범(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

발제

영화적 실천의 또 다른 가능성 -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_이마리오(독립영화감독)

한미 FTA 정세 속에서 독립영화진영과 미디어운동 진영의 포괄적인 대응전략 검토_조동원(미디어운동활동가)

문화예술과 FTA, 문화예술진영의 대응과 범국민 활동을 중심으로_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3부: 무엇을 할 것인가 (종합토론)

토론 발제

긴급 제안!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독립영화 실천기획단 제안을 중심으로_김이찬(한독협 중앙운영위원장)

[여는 글]

우리는 왜 '독립영화' 실천을 하고 있는가 (1)

- FTA 국면이 의미하는 바를 같이 읽어냅시다.

안녕하세요.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장 김이찬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열심히 독립영화의 진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들, 그리고 대안적 가치관과 심미안, 대안적 영화문화의 확산을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돈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용돈을 털어가며,) 독립영화 상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활동가들, 마찬가지로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을 '알려야 하기에', 혹은 '주류영화의 미학적 상투성과 주류사회가 상식이라며 강요하는 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계신 제작자들!

이처럼 독립영화의 '생산의 영역'에서, '대안적 소통망 구축'사업에서, 또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공성강화 영역'에서, 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과의 연계망 확장'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지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이러한 헌신적이고 피곤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하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을 한해 한반도 사회에서,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변동 혹은 저항과 충돌이 일어나리라는 점이고,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지금은 초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제3세계의 약한 정부들과 억압적인 정부들 하에 있는 민중들의 삶, 작은 공동체들의 언어와 문화를 파괴하고 자원과 환경을 약탈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이므로, 이는 우리사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민중들의 삶과 저항에도 관련이 있지요.)

여름에는, 주류미디어들이 '월드컵에 올인하여, 사람들을 정신없이 들뜨게 만들 동안,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따돌리고 '한-미FTA'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어떤 실천을 제안하려고합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전 분야의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이 FTA체결 추진을 위임받은 시한은 내년 여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류방송은, 아직까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고, 신문들은 근거없는 장밋빛 전망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 4년 전 월드컵 기간에 살해된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사건이 철저히 은폐되다가 6개월이 지나고, 전국 민적 저항이 조직된 다음에야 마지못해, 주류미디어가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2000년 이후, 급속히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독립영화'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한독협'이라는 조직에 모여, 그 네트워크에서 실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꾸는 독립영화인들은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를(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가능한 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드는 저의 문제의식은

첫째, '한독협은 이러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여, 현 사회에 대해 별 문제의식 없이, 다른 존재들의 삶의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영리조직 혹은 이익집단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도 결코 그런식으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한독협이 속해있는 우리공동체의 고뇌와 고통에 동참하여, '억압적, 획일적, 파괴적 세계화'를 저지하는 실천을 해내야한다.' 는 것입니다. (1998년, '한독협'이 생긴 것은, 독립영화를 상영,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청직원에 의해서 비영리적 상영관에서조차 쫓겨나고, 영화제를 조직한 인권운동가들과 제작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표현의 자유', '대안적 문화소통의 자유'를 위해 즉, 경찰국가였던 국가권력의 개혁을 위한 저항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과 몇 년 전 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 기억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상업화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희석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는 놈들은 훨씬 힘이 셉니다. 그 폭압적 실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국적 기업들과 그들이 조종하는 WTO, IMF, IBRD, 그와 결탁한 부시정권,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와 휴대폰 통신재벌, 이에 동조한 노무현 정권과 관료들,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의 편에 편승' 하여 다른 나라의 작은 공동체들에 진출(이런 식의 진출은 그 나라 인민의 입장에서 '침략'입니다.) 하고픈 꿈을 유포하는 미디어자본들입니다.

- 끔찍합니다. - 상업미디어가 점령해버린 미국에서 - 이곳에서는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안된다는군요. - 타임지,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LA다저스 등을 포함하여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의 25%의 인구를 독자로 장악한 문어발 미디어공룡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FOX TV의 시청자들의 60%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서, 한독협이 벌이는 독립영화운동이, '개인창작자의 표현기회 증진운동' 썸으로 여겨지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5년만 보더라도 영상산업의 상업화, 콘텐츠의 상품화 경향은 뚜렷합니다. (한국에서는 통신재벌들과 이를 추종하는 관료들이 미디어의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의 급속한 상업화와, MSO, NPP (여러 케이블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여러 지역방송을 갖고 있는 기업들)들의 횡포, DMB, IPTV 등 뉴미디어의 이권을 둘러싼 대기업들 간의 격투를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웬만한 국가권력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초국적 자본이 한국의 영상산업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나마 소위 '공공영역'의 설치와 운동가들의 개입이 초기단계인 지금의 한국에서의 '독립영화'를 (그것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상품'으로 다루려는 노골적인 공세가 벌어지겠지요. 이제 '그들(대재벌)이 원하는 주제와 소재, 수사학, 표현방식'만 (상품이 되는 한에서!) 특이하고 값싼 '상품' 썸으로 만들어 문화산업의 귀퉁이로 포섭하고, 이 폭압적인 체제에 의문을 던지는 영화들은 고사시키려하겠지요. 그때, 독립영화인들은 '값싼 문화콘텐츠'의 제조업자, 혹은 비정규직 임노동자 전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들이 '민중들의 비영리적/공동체적/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공공문화 정책과 실천이 거의 없는 것',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주류미디어자본들이 돈벌이와 소위 나와바리 확장에만 치중할 뿐, 민중의 삶과 문화적 다양성 보호, 공동체의 강화에 무관심해왔다는 것' 등의 이유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투쟁에 선뜻 동참하지 못했던 독립영화인들에게, 더 넓은 마음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미FTA 문제를 해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떤 개인, 어떤 개별자본의 기획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초국적 총자본과 이를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기획물이니깐요.

중요한 것은 '민중의 삶 (우리나라뿐 아니라, 소박하게 살아가는 3세계민중들)이 자본의 탐욕과 세계에 의해 파괴될 위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폭압적인 사회 변동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것은 힘이 없거나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상황에선 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죠. 문화전쟁에선 어떨까요. 예민하고, 특이한 것, 소수자문화, 작고 약한 공동체문화들이 먼저 사라지겠죠. 자신들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독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 부족합니다만, 당당하게 자신의 태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노리는 바와 같이 '이윤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영화제작/유통이 아닌 '공동체내의, 또 공동체들 간의 공평함, 공공의 이익, 연대, 공감, 자주관리, 대안적 상상력'을 위한 문화적 소통행위로서의 '영화제작/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선, 금년에 우리를, 우리의 활동을 성찰하려면 '한-미 FTA' 국면이 제기하는 세계민중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합의를 읽어내야 합니다.

* 이에 관해서, 광범한 의견이 오가는 워크샵이나 포럼등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원 여러분들은 필참입니다. 단체회원들의 경우 모든 조직원까지 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006년 4월 3일 김이찬 드림

[1부 발제]

한국 영화 산업의 신자유주의화, 독립영화는 무엇을 해야하나?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고 있다. 한미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축소가 선언된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철폐와 미국의 문화 침략을 저지해야한다는 영화계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졌다. 이런 부정적 반응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스크린쿼터제가 지킨다는 영화 문화의 다양성이 최근에 와서 외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스크린쿼터제가 할리우드 영화 자본의 독점화라는 영화 시장의 세계화 흐름 속에 자국 영화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국 내의 영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란 것이다. 이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국제적 영화 시장 안에서 한국 영화 산업의 존재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국 영화 시장 안에서 다양한 영화의 존재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영화 시장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이 문제들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영화 산업의 성장 원동력 : 새로운 자본의 개입과 신자유주의적 영화진흥 정책의 등장

한국 영화 산업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 초중반 삼성, 대우 등 전자 산업의 자본이 영화업에 진출한 것은 이전의 한국 영화 산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첫 번째 산업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90년대 중반 케이블 방송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대우, 현대 등 대기업의 영상산업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문화가 폭발하면서 대기업의 문화 산업 진출은 영화, 방송 뿐 아니라 음반 산업 등 다양한 경로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자본의 개입으로 한국 영화 제작 산업은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시기 대기업 자본의 진출은 IMF를 맞아 대부분 철수하고 만다.

이때 자본의 공백을 메워준 것은 일신창투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과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영화진흥금고였다. 일신창투 등의 금융 자본의 등장은 한국 영화 산업의 합리적 성장이라는 산업화의 흐름을 단절되지 않게 유지시켰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진흥금고의 구성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이다. 김영삼 정부의 문화 산업 지원 노력을 이어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영화진흥금고의 조성은 영화 산업을 한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영화를

문화보다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정부의 정책으로 개입된 것이라 할만하다.

90년대 이후 영화 자본의 역사 : 새로운 제작 자본과 상업 자본의 등장과 구조 조정

한국 영화 산업은 개방경제론이라는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되었다. 94년 수입외화의 프린트 별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단락된 영화 시장 개방은 신규 자본의 등장과 함께 한국 영화 제작 자본의 구조를 조정했다. 90년대 한국 영화의 새로운 성장은 신규 영화 기획 인력의 등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 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의 개방 정책 기조에 따라 영화 자본의 외자 유치 노력도 가속화되었는데, 9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영화업 진출은 그간 국내에 투입된 대기업 영화 자본과 다른 사업 방향으로 주목할만하다. 제일제당은 95년 8월, 멀티미디어 사업부를 설립하고 영화 산업에 진출하였는데, 본격적인 진출 이전인 95년 2월 스피버그, 카젠버그, 게펜이 설립한 새로운 할리우드 스튜디오 [DreamWorks SKG]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세계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이어 제일제당의 영화 상업업 진출로 이어진다. 제일제당 멀티미디어 사업부 내에 극장 사업팀은 96년 12월 홍콩의 골든하베스트,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와 함께 씨제이골든빌리지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내의 본격적인 상업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첫 번째 성과가 바로 98년 4월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이라는 CGV 강변11이다.

CGV강변11의 등장은 한국 내에 멀티플렉스라는 극장이 생겼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작 자본 중심으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던 경향이 상업 자본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외자 유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어 2000년에 등장한 동양 그룹의 메가박스 역시 미국 LCE(Loews Cineplex Entertainment Corp.)의 50% 지분 투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외자 유치를 통한 대기업 자본의 상업업 진출은 상업 시장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시켰다. 단관 극장의 폐관과 복합 극장화의 흐름, 목요일 개봉, 할인경쟁 등은 모두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의 결과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새로운 신규 대기업 영화 자본은 외자 유치라는 무기로 영화 자본의 세계화를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자 유치가 단순히 상업업에만 머무른 것은 아니다. 대기업 자본과 달리 토착 영화 자본의 메이저화의 대명사인 시네마서비스 역시 2000년 벤처투자사인 워버그 핀쿠스(WARBURG PINCUS)로부터 외자유치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그간 크게 고려되진 못했지만 외자 유치를 통한 자본의 세계화가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2000년대 영화 자본의 성격 : 대기업 자본에서 상장 투자 자본으로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제작 자본의 성장은 자본의 확대를 위한 상장 노력으로 재구성된다. 2002년

2월, CJ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시네마서비스 역시 2002년 넷마블과의 합병을 통해 플래너스라는 이름으로 상장 회사로 탈바꿈한다. 2002년 CJ엔터테인먼트의 상장과 플래너스의 등장은 한국 영화 산업에 두 번째 금융 자본의 등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 시장에 영화 산업이 진출한 것은 산업화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영화 산업 역시 규모를 거대화하는 독점 자본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 자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금융 자본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각의 제작 자본은 제작 흥행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배급, 상영 시장을 수직계열화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CJ엔터테인먼트는 CGV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순 제작 배급업에 머물렀던 시네마서비스는 2002년 8월 프리머스시네마라는 극장 사업자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수직 계열화를 시작했다.

제작-배급-상영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는 한국 영화 산업을 독과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할리우드 독점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메이저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독과점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수하게 되고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한국 영화의 제작과 상영 시장의 양극화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영화 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폐해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등장과 멀티플렉스 사업의 확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국내 배급 상영 시장에서 할리우드 직배사보다 일정한 힘의 우위를 획득하게 되었지만, 제작 자본의 구조조정, 상영 시장의 구조 조정을 통해 다양한 영화의 상영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익 창출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자본의 속성 상 상대적으로 덜 상업적인 영화들이 시장에서 패퇴하게 되고 독립영화 등 비상업적인 영화들의 시장 개입의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또한 상영 시장의 구조 조정은 작은 규모의 예술영화를 상영하던 극장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한 폐해가 소규모 영화의 상영 시장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독점 자본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라는 허울 아래 상업적인 영화의 제작을 양산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영화 제작을 목표로 한 제작펀드와 제작사들 역시 버티지 못하고 상업적인 영화 제작에 뛰어들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하사탕>, <오!수정> 등의 영화에 투자 했던 유니코리아가 <투사부일체>에 투자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만하다. 산업의 성장,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확대의 이면에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영화의 제작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잠복하고 있었으며, 산업적 성장의 이면에 소외받는 영화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영화계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영화 산업의 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영화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영화 산업의 신자유주의화의 가속 : 영화 제작 자본의 우회 상장 붐, 총무로의 상장 시대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가 있는 후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가 문화 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제 사수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집회현장이 보도된 [씨네21] 540호(2006.2.14.) 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특집 기사인 [총무로 상장시대 - 상장 태풍, 총무로를 덮치다가 그것이다. 2002년 CJ엔터테인먼트와 플레너스의 상장 이후 한국 영화 제작 자본의 상장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코스닥에 직접 상장 보다는 우회 상장이라는 경로를 통해 상장되고 있다. 매니지먼트사인 싸이더스HQ는 속옷브랜드인 라보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며 2003년 9월 우회 상장을 본격화한다. 이어 2004년 1월 싸이더스가 코스닥 상장사인 씨큐리콕에 전액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상장하였으며, 명필름과 강제규 필름 역시 코스닥 상장사 세신버팔로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상장하였다. [씨네21] 540호의 기사에 따르면 IHQ(싸이더스HQ와 라보라의 합병회사) 우회 상장 이후 2006년까지 우회 상장된 영화 관련 기업은 17개이며, 업종전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영화 관련 사업에 뛰어들은 상장기업들은 14개다. 그야 말로 붐이라 할만한 숫자다.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메가박스 그리고 최근 등장한 롯데시네마로 분할되어 있던 영화 상영 배급 시장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작사들의 노력이 엔터테인먼트 업에 대한 주식 시장의 관심과 맞물려 우회 상장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영화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성장을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영화 시장의 변화를 읽는 세 개의 키워드 : 글로벌화, 매체 다양화, 제작 콘텐츠 다양화

최근 등장한 우회 상장 영화 자본과 기존 영화 자본의 흐름은 크게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화, 둘째, 매체 다양화, 셋째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이다.

(1) 글로벌화

글로벌화는 말그대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미다. 과거부터 협소한 한국 영화 시장을 넘어 아시아 시장,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 시장 개방과 맞물려 다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최근 아시아 시장 등에 몰아친 한류 열풍은 한국 영화 자본의 글로벌화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CJ엔터테인먼트, MK픽처스, 나비픽처스 등 영화사들은 중국과 일본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IHQ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의 글로벌 제작에 이어 <태이지>를 작업하며 기존 영화 제작사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글로벌화를 가속하고 있다. 최근 이노츠에 인수된 LJ필름의 경우 글로벌 스튜디오를 지향하며 세계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투쟁이라는 국내 상영 시장의 싸움과 별개로 해외로의 무한 진출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2) 매체의 다양화

두 번째 키워드인 매체의 다양화는 새로운 미디어의 폭발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영화 산업 내의 요구라기 보다는 외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DMB,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매체에 요구해야 할 콘텐츠의 필요성을 강제했다. KT의 싸이더스F&H의 인수, SKT의 IHQ 지분 투자 등은 바로 매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기존의 영화 자본이 영화 제작 배급업을 근간으로 했다면, 영화 제작 배급업이 아닌 다른 매체를 근간으로 영화 자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

세 번째 키워드인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는 새로운 매체의 폭발과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에 일정하게 근거한다. 우회 상장된 진인사필름(태화일렉트론), 팝콘필름, 팬텀, IHQ 등은 외주 드라마 제작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회사 중 일부가 저예산영화의 제작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상영 배급업에 뛰어들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경향은 많은 편수의 영화 제작을 통해 배급 상영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이노츠의 경우 저예산 독립영화의 유통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저예산 영화 제작이 검토되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확대에 따른 단장기적 영향

이런 변화는 한국 영화 시장을 다시 한번 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독립영화 진영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단기적 영향

우선 자본이 대거 들어오면서 영화 제작 산업이 호황을 맞게 될 것은 당연하다. 벌써부터 올해 제작될 영화의 편수가 100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60~70편을 유지했던 제작 배급 편수가 자본의 유입으로 40~50% 성장한다는 것이다. 제작 콘텐츠 확대로 신규인력의 필요성이 가중되며, 이에 따라 단편영화, 독립장편영화 등을 연출한 독립영화인들의 충무로 진출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예산 영화 제작 확대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영화 제작이 가속화 될 것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독립영화 진영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영 배급 시장의 확대가 오면서 다양한 영화의 상영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제작된 작은 규모의 영화들의 상영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는 전체 독립영화 진영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개별 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시장 친화적인 소재와 작품에 제한될 것이 뻔하다. 자본의 이익확대를 우선으로 하는 시장 성격 상 예술지향적인 영화나 사회적 소재를 다룬 급진적 행동주의적 영화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 뻔하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월드컵 등을 소재로 한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 연성화된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주종을 이루게 될 것임은 뻔하다. 게다가 최근 한국 영

화 시장에 대한 다양성의 요구가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에 대한 자본의 관심과 요구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다.

최근 스폰지 등 외화 수입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틈새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소규모 배급사의 경우 저예산 영화의 제작배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국 영화의 수입에 주력하면서 상업화된 시장의 빈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릴 것으로 기대된다.

(2) 장기적 영향

자본의 폭발에 따라 제작 편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잉 생산에 따른 수요가 함께 창출되지 못한다면, 금융 투자 자본의 속성상 투자금이 회수되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제작 자본이 축소될 것이며, 시장 안에서의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구조 조정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수반된다면 한국 영화 시장은 경쟁에서 생존한 소수 국내 독점 자본과 할리우드 독점 자본의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덜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영화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 호황에 의해 충무로로 많은 인력들이 진출하게 되겠지만, 제작 편수의 축소는 영화 인력의 구조 조정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상영 배급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잠시 존재하는 듯 보였던 영화 문화의 다양성은 급격하게 후퇴할 것이다.

신자유주의화가 독립영화에 미치는 영향

이쯤 되면 신자유주의적 영화 산업의 성장이 독립영화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는 자명해 보인다. 당분간은 독립영화 진영에도 일정하게 자본이 밀어닥칠 것이다. 물론 이 자본은 상업성이 보장된 인력과 프로젝트에 한정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개입은 느슨해진 독립영화 진영의 연대를 더욱 느슨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맞는 호황기를 주류 미디어는 다양성이 확보되는 시기로 평가할 것이며,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책 역시 이런 변화에 안주하며 비영리적 공공적 관점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호황이 지난 후 구조 조정의 시기가 오면 독립영화 진영은 다시 한 번 침체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WTO 서비스 개방 국면, 한미FTA가 추진되는 국면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는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보조금(영화진흥금고, 혹은 새롭게 마련한다는 4000억원의 기금)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 상황이 가속된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현재 수준의 공공 지원 역시 후퇴되거나 없을까?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독립영화 진영의 대응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독립영화 진영이 할 일은 우선적으로 신자유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한미FTA, WTO 협상 등 다국적 독점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하게 될 신자유주의 흐름은 어떻게든 막아내어야 한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독점자본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 영화 정책의 경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소극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지향이 문화를 산업/상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일정하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독점 자본을 제어하는 상영/배급 시장의 공공적 정책 개입은 필수적이다. 또한 비영리적 영화(독립영화)에 대한 제작/상영/배급 구조를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비영리적 영화의 경우 공정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소외될 수 있다. 비영리적 문화 예술 활동을 여전히 시장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대로 된 문화 다양성이 획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립영화 진영의 경우 독점 자본 중심의 상영/배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이 속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적 영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상영/배급 정책이 영화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시장 조건에 구애받는 독립영화 전용관 1관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영리적 목적을 떠나 상영 배급 될 수 있는 공공 배급/상영 정책을 제안하고, 단순한 비상설 상영관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안정적으로 소개되고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공공 상영관 정책의 마련과 이를 통한 상영 확대가 필요하다. 비영리적 영화 문화, 영화제작-배급-상영을 확보하는 싸움은 모든 공적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 복지적 관점의 정책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에 다름 아니다. 공공정책의 확대와 이를 통한 독립영화의 진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쟁취되기 어렵다. 한국 영화 산업과 자본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과 대응, 그리고 독립영화를 위한 큰 그림 속에서의 대응이 현재 독립영화 진영에 절실히 요구된다.

[1부 발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¹⁾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1. 들어가면서

스크린쿼터의 반동강과 함께 2004년까지만 해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FTA가 정세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법’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1년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통상협정은 반드시 미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국내법상 관련 규정이 없음을 당연하다. 하지만 이로부터 벌써 한미FTA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두자. 사실 한칠레FTA 이래 통상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었음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거래를 통하다’는 뜻 정도로 번역될 통상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서 유래되는 사실 매우 촌스럽고 전근대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것의 진정한 ‘현대적’, 현재적 의미를 놓치기 십상이다. 아마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평균담론은 ‘수출의 준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개발독재시절 ‘수출입국’을 외치던 시절의 이런 담론이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놓치고 나아가 신모델 FTA에 내장된 고도의 위험성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단단히 일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성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²⁾ 이 GATT 1947 24조 제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새로운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유럽국가들로서는 미국의 주도하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FTA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에 맞서 1994년 북미FTA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이 최근까지 FTA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자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자국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특히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의 실패이후 미국은 GATT/WTO 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 기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이 양자들을 통해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 1) 이 글은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초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완성된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 2) FTA와 더불어 GATT1947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스크린쿼터를 명문화하고 있다. GATT1947은 1994년 WTO 출범과 더불어 효력갱신되어 지금의 WTO의 몸통을 이루는 협약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GATT/WTO내에 FTA의 근거 조항과 아울러 스크린쿼터의 근거조항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GATT/WTO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계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스크린쿼터의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FTA도 스크린쿼터도 모두 GATT/WTO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양자 내지 지역틀이야 말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에 더 없이 유리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GATT 1947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신종 개념을 통해 투자(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면 신모델FTA의 포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1)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2)농산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각 철폐,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4-18년에 걸쳐 철폐, (3)제약, (4)초국경적 서비스: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특급우편, 금융업, 전문직, 텔레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및 최혜국 대우, (5)금융서비스: 미국계 은행, 보험, 증권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영업허가, (6)전자상거래(e-commerce):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문서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7)투자: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보호, (8)지재권: 미국내법수준의 지재권 보호, (9)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10)경쟁정책: 반경쟁적 관행금지 및 법적 제재, (11)분쟁해결 절차 규정, (12)노동, (13)환경 등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GATT/FTA가 주로 위의 (1)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WTO/FTA는 여기에 최소 10여가지 부문이 합쳐진 것이다. 특히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이 한미투자협정(BIT)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관련 미국은 기존의 BIT모델 즉 BIT1994를 최근 대폭 개정해서 BIT 2004모델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그 내용은 위 항목 가운데 (7)투자와 (5)금융서비스를 합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즉 한미 FTA는 BIT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GATT/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

2. 왜 한미FTA인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미FTA를 원하는 것일까.

부시 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의 중심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아시아의 실질적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은 군사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향유해온 국제정치적 기득권은 대중 견제의 교두보역할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한국내의 반미정서 나아가 노무현정부하 한미동맹구조의 균열동향 등은 사실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흔히 한미 양국 공히 언급하듯 FTA는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안보적 협정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한편으로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로 삼고,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 진출의 교두보로 인입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소망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지난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언급처럼 6자회담이후 한미FTA논의가 급격히 진전되고,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 PSI관련 한국의

대미 양보(?)가 2개의 트랙을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 한미FTA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빅딜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거시 정치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한미FTA 그 자체의 경제적 실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말하듯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보여 주듯, 한미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인 전미주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미국의 국가별, 지역별 FTA의 예상 경제효과
(단위 10억달러)

APEC	ASEAN	전 미 주 (FTAA)	미-칠레 FTA	미-싱가폴 FTA	한-미 FTA	미-남아공 FTA	미-중미 FTA	미-호주 FTA	미-모로코 FTA
244.25	12.98	67.59	4.41	17.5	30.1	9.61	17.26	19.39	5.97

(자료: J.K.Jackson, *Trade Agreements: Impact on the U.S.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0, 2005 재인용)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아래 2004년 말 전경련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국은 한일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표2> 주요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양자간 FTA의 효과*

	FTA상대국의 기술수준**	사회후생효과	산업생산효과
한-중 FTA	51.7	22.99%	27.78%
한-일 FTA	90.8	3.17%	-25.41%
한-EU FTA	90.1	2.97%	-25.03%
한-미 FTA	94.9	4.73%	-27.37%

* FTA상대국간 양자간 FTA가 가장 먼저 체결될 경우의 효과추정치임.
 **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지수 100으로 기준으로 산정. (15개 부문별 산업기술지수의 평균치, 한국의 기술지수는 7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2003)에 근거)
 *** 상기 추정결과는 한국과 FTA상대국별 산업구조 및 수출경합도가 대칭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기술력 격차만의 효과를 고려한 추정치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FTA로드맵과 보완과제>,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2004.11.)

한미FTA는 분명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부분에 걸쳐 행사해온 압도적 규정력으로 볼 때,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절대적 친미'로부터 '상대적 친미'로의 진화는 지배블록 내지 지배엘리트 내 전통적 친미파 혹은 '한미동맹파'의 지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나아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재편과 적응을 강제하는 조건이었다. 특히 김대중정권-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세전개는 한미동맹파의 계도화까지 요구되는 위기징후였음에 분명하다. 부시정부내 네오콘의 시각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공조의 균열은 한미동맹 구조 자체의 와해로 과대 선전될 만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포괄적 정치경제적 협정으로서 한미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함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한국사회내 지배블록내 한미동맹파의 총반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FTA, 전략유연성, PSI등의 어젠다와 남북관계상의 모종의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간 빅딜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한국사회 신주류와의 대타협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인해 '새로운 양시앙 레짐'이라는 역사적 기형아가 그것도 조산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3.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사실상 가장 체계적인 한미FTA 경제효과 보고서라 할 미국계무역위(USITC)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이렇다. 한미 공히 GDP나 고용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적어도 FTA 체결 4년후면 미국이 대한 무역흑자국으로 된다. 다시 말해 미국에 훨씬 더 큰 실익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 이후 미의회가 한미FTA를 위해 당장 나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테러전쟁'에 몰두하였고, 이후 논공행상차원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칠레등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실익이 없는 FTA와 덩치가 훨씬 큰 전미주FTA(FTAA)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초부터 한국이 미국에 FTA를 먼저 제안했고 그해 하반기에 당시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서 FTA와 관련한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2005년 1월에서 6개월간 '한미FTA사전 실무점검회의'를 한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한국 정부가 2월21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작성한 <한미FTA추진과 협상전망>이라는 문건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05.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 의회와 협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강조는 원문).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정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05년 6월 양국간 검토가 끝난 뒤, 보도에 따르면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포트만은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 이 쟁점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포함된다." 미국은 이 4대분야에 대한 한국의 조치야 말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였고, 이후 "2006년 1월 말, 한국은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제안하였다(Manyin(2006), 29쪽). 그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대로 아래와 같다.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4일)



한-미 FTA협상 관련 미국의 4대 요구와 한국의 조치

	의약품	스크린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요구 한국 정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2005년 10월30일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26일 축소 발표
	쇠고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우병 파동 때 금지된 수입 재개 2006년 1월13일 수입 재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가스기준 강화 방침 취소 2005년 11월6일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발표

‘관계부처합동’측은 이를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강조는 원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는 미국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말이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왜냐 하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단순히 미국을 비난하면 될 일이지만,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 넘겼다고 할 때 스스로를 이른바 ‘사대매국’ 정권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솔직하다. “한미간 경제규모와 의존도상의 불균형을 놓고 볼 때, 대개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래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 식약청 그리고 환경부등 전통적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과 거의 접촉이 없는 ‘국내용(domestic)’ 관계부처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韓) 전략의 한 요소는 이러한 현안에 한국의 내각이 나서게 만들어, 해당부처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었다.”(위의 글, 16쪽) 쉽게 말해 미국의 통상전략은 몇몇 ‘촌스러운’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만든 뒤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게끔 압력을 넣는다는 말이다. 아마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말려든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문광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쿼터축소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무회의내에서는 특히 경제부처 연합군의 십자포화속에서는 ‘집단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이 요구한 4대 핵심쟁점은 이렇게 아예 협상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한채 명을 다하고 만다.

4. 한미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그러면 아래에 한미FTA로 예상되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특실을 따져 보기로 한다.

(1) 대미 무역 적자

한미FTA의 경제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10여개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애용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자료와 2001년 미 상원 재경위의 위촉으로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발표한 자료가 가장 공식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의 이 분석은 이미 국내 언론이 FTA홍보를 위해 수차례 보도한 바 있고 또 최근까지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균형모델(CGE)³⁾라는 동일한 분석모형을 통해 제시된 두가지 분석은 한미FTA 동태

3) FTA의 확산과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GE모형이다. 신고전파

효과에 대한 거시경제 추정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한국경제에 대한 FTA 경제효과 비교

	한국(KIEP)	미국(USITC)
무역수지	-50억불	-90억불
GDP	최대 1.99%	0.7%
고용	10만개	...

KIEP의 자료가 한국경제에 상당히 희망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면, USITC의 추정은 그렇지 않다. 두가지 자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효과 분석은 한국의 무역수지상 흑자감소, 적자 증가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무역위에 따르면 2001년 다음 해 FTA가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때,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즉 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즉 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물론 한미간 기술력격차(한국 71, 미국 95, 한국은 미국의 약 75%수준, 위 표2 참조)를 반영할 수 없는 분석모형(CGE) 자체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아무튼 한국 정부의 말처럼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2002년 한미 무역수지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표4>FTA체결 4년 뒤 한미 무역수지

(단위: 억불)

	2002	FTA체결 4년 뒤
수입①	230	422
수출②	328	431
무역수지(②-①)	98	9

(자료: 미국재무무역위원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98억 달러는 9억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측 주장처럼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하더라도,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GDP와 관련해서도 미국재무무역위는 한미 양국 모두 FTA가 GDP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very small)”하다고 예측하는 반면, KIEP의 그것은 한국이 최대 약2%의 GDP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 주장한다. 만일 미국재무무역위 추정처럼 GDP증가가 0.7%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GDP 자연증감분과

경제학의 기본가정에 입각 설계된 이 분석모델은 그 유용성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그 설명력은 제한적임에 주의를 요한다. 이 모델은 첫째, 가상현실에 불과한 완전시장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완전 일치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교역당사국은 완전고용상태임을 전제한다. 즉 한 산업부문에서의 실업은 자동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에 의해 상쇄될 것임을 가정한다는 말이다. 셋째, 투자와 관련해 이 모델은 B국의 투자증가가 A국 국내투자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 협정이 없다면 국내에 투자되었을 자본이 B국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이 모델은 A국의 소비자가 A국의 제품을 무조건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결과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예컨대 A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B국 자회사간의 이른바 ‘기업내(intra-firm)무역’이 전적으로 간과된다. 다섯째, 이 모델은 또한 직접투자와 투기성 간접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증권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때 이는 심각한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CGE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잘 해야 ‘참고용’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어려움에도,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치 이것이 ‘사실’ 혹은 ‘증거’처럼 인용되고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세한 것은 Jeff Faux, Thea Lea, The Effect of George Bush's NAFTA on American Workers: Ladder Up or Ladder Down,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1992 참조.

원/달러 환율변동을 감안할 때 거의 상쇄될 크기에 불과하다. 2006년 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할 때 GDP는 -0.35%, 경상수지는 -29억달러 하락한다(<표 5>). 다시 말해 1달러당 1,000원에서 환율이 10% 하락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GDP는 -0.7%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FTA보다 차라리 환율방어가 훨씬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표 5> 원/달러 환율 5% 하락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효과(단위 %포인트)

GDP	소비자물가지수	수출물량	수입물량	경상수지(억달러)
-0.35	-0.5	-1.6	1.7	-29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285호 2006.1.17)

업종별,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미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래 무역협회가 200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의 편익은 3대 업종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 자료는 쌀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미국제무역위 조사는 미국산 쌀의 수출이 약200%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섬유의류 분야의 대미 수출이 약 18%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쌀, 한국의 섬유의류 이 양국의 최대 수혜업종으로만 보자면 한미FTA는 결국 “옷팔아서 쌀 사먹는” 모양이다. 그런데 무역협회 자료에 근거 3대 수혜업종의 업종별 무역수지를 분석해 볼 때 약6억불의 흑자를 보는 반면, 최대 피해업종인 농산물부문의 적자만 약 -9억9천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미FTA로 인한 있을 수 있는 수출증가로 인한 ‘득’은 4대 재벌에 집중되고, ‘실’은 농업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표6>한미FTA의 교역확대효과

품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관세율(%)	대미수출	수출증가액	관세율(%)	대미수입	수입증가액
농산물	9.8	233	18	52.2	2,568	1,005
수산물	2.0	63	1	16.8	150	19
석유	2.5	456	14	5.8	72	1
광물	3.7	318	14	6.0	865	10
목재	1.2	534	4	3.7	884	28
섬유	9.9	2,838	194	9.8	370	43
가죽고무	7.1	666	32	8.9	610	47
금속	2.2	1,387	45	5.2	1,380	62
화학제품	4.0	1,131	71	7.0	3,397	183
수송기계	2.6	9,441	410	6.0	919	98
기계	1.3	5,033	18	6.1	3,821	242
전자	2.0	11,161	397	5.5	7,397	293
제조품	3.2	952	20	6.4	2,381	133
계		35,888	1,239(3.6%)		24,814	2,165(8.7%)

자료:무역협회(2004)

2) 금융투기화

투자의 완전 자유화 역시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더군다나 그간 한미투자협정(BIT)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내적 갈등과 관련해, 특히 론스타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 4조원 가

량의 M&A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 과세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물론 투기자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그간 한국사회내에서 논란이 되어온 BIT 표준안 즉 BIT 1994를 2003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BIT 2004라는 신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의 BIT 1994에다 금융서비스를 포함시켜 대부분의 규정들을 포폭강화한 안이다. 한미FTA는 바로 이 BIT 2004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기자본문제와 관련해 제기되어 온 수많은 문제들은 거의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대한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다. 또한 그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표7>) 즉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장은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도한 구조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

<표7>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

	2002말	2003말	2004말	2004년 중		
				증감액	거래요인	기타요인
직접투자	626.6 (22.4)	660.7 (19.2)	877.7 (21.0)	217.0	81.9	135.1
증권투자	1,175.8 (42.0)	1,687.1 (49.0)	2,138.7 (51.1)	451.7	167.8	283.8
기타투자	998.4 (35.6)	1,094.0 (31.8)	1,167.2 (27.9)	73.3	44.3	29.0
계	2,800.7 (100.0)	3,441.7 (100.0)	4,183.6 (100.0)	741.9	293.9	447.9

주: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형태별로 볼 때 그나마 건전성 FDI라 할 공장설립형 (Greenfield)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 2005년 현재 45.6%에 달한다.(<표8>) 여기서 산자부의 M&A비율 산출은 구주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의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일반적 M&A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M&A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8>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백분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Greenfield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이 있지만 2004년 37.0%를 차지(표 9),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003년 약 10억달러에서 30%가량 증가한 825건,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9>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2	2003	2004
미국	4,500(49.4)	1,240(19.2)	4,725(37.0)
일본	1,404(15.4)	541(8.4)	2,249(17.6)
EU	1,680(18.5)	3,062(47.3)	3,005(23.5)
중국	249(2.7)	50(0.8)	1,165(9.1)
기타	1,269(13.9)	1,575(24.4)	1,626(12.7)
전체	9,102	6,468	12,770

(자료:산업자원부)

다음 간접투자를 보자.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총유출입규모로 볼 때 그것은 2005년 기준 약3,000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것을 순유입규모로 본다면 매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0> 이는 유입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가 갖고 있는 투기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2005년의 경우 2002년 -8.3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24.3억 달러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다.

<표10>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추이¹⁾

(억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P				
					1/4	2/4	3/4	4/4	연중
순유입	75.1	△ 8.3	135.2	93.1	△ 0.9	△ 11.4	6.0	△ 18.0	△ 24.3
유 입	439.8	653.8	815.7	1,160.4	345.9	313.1	392.0	429.8	1,480.8
유 출	364.7	662.1	680.5	1,067.3	346.8	324.5	386.0	447.8	1,505.1
환율 ²⁾	1,290.8	1,251.2	1,191.9	1,144.7	1,022.5	1,008.0	1,029.2	1,037.0	1,024.3
KOSPI ³⁾	693.7	627.6	810.7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79.4

주 : 1) 비거주자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입출금 실적 기준

2) 기간평균, 원/달러환율(매매기준율)

3) 기말기준

자료 : 외환전산망

특히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이 1719억 달러 대 30.7억달러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표11) 나아가 주식소유비중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그것은 0.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직접 투자의 경우 M&A,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주식 즉 손쉽게 단기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1>외국인 증권투자 잔액 및 비중 추이

(억달러, %, %p)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 ^P				2005년중 증감
					1/4말	2/4말	3/4말	4/4말	
주식	754.2	818.5	1,240.4	1,719.3	1,902.6	1,932.1	2,339.8	2,667.5	948.2
	(32.1)	(32.8)	(37.7)	(40.1)	(39.6)	(38.6)	(39.0)	(37.2)	[△2.9]
(거래소) ¹⁾	713.3	785.4	1,195.2	1,672.9	1,849.8	1,873.0	2,266.0	2,572.8	899.9
	(36.6)	(36.0)	(40.1)	(42.0)	(41.9)	(41.0)	(41.3)	(39.7)	[△2.3]
(코스닥) ¹⁾	40.9	33.1	45.2	46.4	52.7	59.1	73.8	94.7	48.3
	(10.4)	(10.5)	(14.4)	(15.4)	(13.5)	(13.4)	(14.2)	(13.5)	[△1.9]
채권	3.3	5.5	14.8	30.7	41.7	38.6	42.6	43.5	12.8
	(0.1)	(0.1)	(0.3)	(0.5)	(0.6)	(0.6)	(0.6)	(0.6)	[0.1]
계	757.5	824.0	1,255.2	1,750.0	1,944.3	1,970.7	2,382.4	2,711.0	961.0

주 : 1) 상장주식중 직접투자자에 따른 보유분 포함(시가총액 기준)

2) ()내는 외국인 보유비중, []내는 2005년중 증감

자료 : 금융감독원

한미간 직접투자부문에 있어서의 과도한 불균형은 포트폴리오투자자와 관련해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다. 아래 <표12>에서 보듯이 2003년 기준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534억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79억달러에 약 8배의 차이가 난다.(표13) 그나마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가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장기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미국계 금융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요한 당사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표12> 미국의 대한(對韓) 포트폴리오 투자(미국 자료로부터 IMF가 산출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4,425	49,121	10,760	4,217	..	91	15,185	53,429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 액수 없거나 50만불 이하 의미, ... 자료 부재 의미)

<표13>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한국 정부가 IMF에 보고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25	961	1,182	6,963	749	38	2,055	7,961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한미경제관계는 최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중심에서 자본거래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될 투자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전망이다.

그런데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 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 말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미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경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2조5천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외국인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즉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말 시가총액 기준 한미 각국의 자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을 볼 때 미국은 11% (200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0%전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한미경제관계에 있어 그나마 유지되는 대미 상품수지상의 흑자기조가 한미FTA를 통해 무너질 때 그것은 아래에 보게될 대미 서비스교역상의 심각한 적자 그리고 한미간 자본거래상의 '국부유출'와 서로 맞물려 예상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상 처음 한국의 서비스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어 서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적자폭은 연말까지 14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0년 28억달러 적자에서 최근 5년사이 적자폭이 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상품수지의 흑자가 서비스수지의 적자로 인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14> 서비스무역 부문별 교역규모 및 비중(2004년)>

(억달러, %)

	서비스무역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기술무역	운수서비스	기 타
수 출	414	84	57	18	224	31
수 입	502	135	120	45	179	24
수 지	-88	-51	-63	-27	45	7
교역규모	916	218	177	62	403	55
교역비중	100.0	23.8	19.3	6.8	44.0	6.0

(출처:무역협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최근 들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왔다. 아래 <표13>에서 보듯 한미서비스무역은 정부서비스와 기타서비스를 제외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등 거의 전부문에서 대미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폭은 2003년 기준 33억달러에 달하고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설사 한국이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 FTA가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⁴⁾

<표15>한미서비스무역 (단위 백만달러)

		총서비스무역액			대미서비스무역		
		2000	2003	연평균 성장률	2000	2003	연평균 성장률
		금액	금액		금액(비중)*	금액(비중)*	
서비스전 체	수출	30,534	32,957	2.6	9,269(30.4)	9,333(28.3)	0.2
	수입	33,381	40,381	6.6	12,060(36.1)	12,665(31.4)	1.6
	수지	-2,848	-7,424	37.6	-2,791(98.0)	-3,332(44.9)	6.1
운수	수출	13,687	17,180	7.9	3,569(26.1)	4,065(23.7)	4.4
	수입	11,048	13,613	7.2	3,543(32.1)	4,112(30.2)	5.1
	수지	2,639	3,567	10.6	26(1.0)	-47(-1.3)	-221.8
여행	수출	6,834	5,358	-7.8	1,068(15.6)	728(13.6)	-12.0
	수입	7,132	10,103	12.3	1,854(26.0)	2,170(21.5)	5.4
	수지	-29.8	-4,745	151.7	-786(263.8)	-1,442(30.4)	22.4
통신	수출	387	341	4.1	173(44.7)	130(38.1)	-9.1
	수입	623	693	3.6	218(35.0)	210(30.3)	-1.2
	수지	-235	-352	14.4	-45(19.1)	-80(22.7)	21.1
보험	수출	68	34	-20.7	-3(-4.4)	-24(-70.6)	100.0
	수입	146	390	38.8	12(8.2)	39(10.0)	48.1
	수지	-78	-356	66.1	-15(19.2)	-63(17.7)	61.3
특허권등 사용료	수출	688	1,311	24	38(5.5)	428(32.6)	124.2
	수입	3,221	3,570	3.5	1,913(59.4)	1,951(54.6)	0.7
	수지	-2,533	-2,259	-3.7	-1,875(74.0)	-1,523(67.4)	-6.7

4) '특허권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상한다. 주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공사의 기획 및 감독 등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한다.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며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중 특히 금융서비스에는 수출신용장(L/C), 금융리스,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를 계상하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하드웨어관련 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통신사의 뉴스서비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한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는 영화제작, TV 프로제작 등과 관련된 서비스료, 대중매체 배급권료, TV 중계권료 및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상하며 건설서비스에는 통상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비공사를 계상한다.

사업서비스	수출	7,200	6,687	-2.4	3,421(47.5)	2,708(40.5)	-7.5
	수입	10,328	11,049	2.3	4,144(40.1)	3,788(34.3)	-2.9
	수지	-3,128	-4,362	11.7	-723(23.1)	-1,080(24.8)	14.3
정부서비스	수출	787	1,203	15.2	670(85.1)	1,033(85.9)	15.5
	수입	425	453	2.1	161(37.9)	161(35.5)	0.0
	수지	363	751	27.4	509(140.2)	872(116.1)	19.7
기타서비스	수출	881	842	-1.5	333(37.8)	265(31.5)	-7.3
	수입	459	510	3.6	215(46.8)	234(45.9)	2.9
	수지	422	332	-7.7	118(28.0)	31(9.3)	-36.0

*비중은 총서비스무역중 대미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말함

(출처:한국은행)

(Jinkyu Lee/Hongshik Lee,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Seoul: KIEP 2006, p. 96 재인용)

물론 위 한미 서비스무역상의 적자는 금융은 별개로 하더라도 보건 의료, 교육, 통신·방송, 법률·회계·컨설팅·설계등 전문직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에너지등 공공부문등이 완전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문의 예상 피해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현실로 될 경우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대미 적자폭은 당연히 급증할 것이다. 이와 관련 KIEP보고서에서조차도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미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산업 점유율이 30%에 달하고(미국은 19%), 98년 증권시장이 완전개방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이미 외국자본 그 중 미국계 자본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의 주주가 된 칼라일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 캐피탈이 천문학적인 평가차익을 얻은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는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FTA협상은 과거 한미 BIT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MF직후 한미BIT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부분은 이미 오래전 시중 월간지(월간 <말>지 2001년 5월호 참조)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대표간의 비밀전문이 공개되어 그 전모가 거의 알려져 있다. 아래 그 기사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

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 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 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아마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도 한국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과연 여기에 한국측이 어디까지 버틸 지는 미지수이다.

제2금융권을 포함 금융공공성의 포기와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한미FTA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미국제품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자 후생효과는 일방적인 낙관론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추가 부담과 방금 말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부문에서의 지출증가로 후생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강조는 인용자),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4) 농업공황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협상에 응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청천벽야’수준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KIEP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어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NAFTA이후 멕시코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들은 대부분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파티스타

농민반란이 보여 주듯 이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갈등이 유발될 지도 모를 일이다.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유율의 신화가 말로 허다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1997년과 비교해 한국영화 시장의 규모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동기간 한국영화의 매출은 약 5배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동기간 외국영화의 매출 역시 2배가량 증가한다. 쉽게 말해 파이가 커짐으로써 한국영화, 외국영화의 매출이 동시성장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단지 커진 파이의 많은 부분을 미국영화가 아니라 한국영화가 '먹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내 수익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한국영화의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고 겨우 세편중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못보게 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5%인데 비해,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고작 1.5%를 좀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가 매년 70편가량 생산되는 데 미국영화는 매일 한 편씩 상영해도 2년이 걸리는 양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사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아주 잘 보여준다.

<표16> 멕시코의 연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작 편수	107	101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일수 변천 : 1993~1994년 30%, 1995년 20%, 1996년 10%, 1997년 5%, 1998년 폐지

(자료:외교통상부)

위의 <표16>이 보여주는 것처럼 멕시코의 영화제작 편수는 1990년 98편에서 91년 32편으로 격감하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다. 북미FTA가 발효된 94년 이후 멕시코 정부의 '자발적' (?) 자유화 조치로 매년 10% 축소하다가 완전 폐지되는 98년 이후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멕시코 영화산업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켜 결국 사망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현 정부에 의한 20%(73일)로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더군다나 위기징후를 보이던 당시 멕시코 영화산업과는 달리 유지산업단계에서 이 제 막 비상하고자 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20%로의 축소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실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적인 자국산업 탄압조치와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참여한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분석팀의 분석에 의하면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제상영일수가 146일 이하로 줄어 들기 시작할 때 적용가능하다. 당장 1-2년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73일을 일단은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이후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한국영화가 “쿼터 축소 - 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측에서 행, 재정적 지원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식 FTA에 내장된 각종의 독소 조항 특히 내국민대우조항에 근거 오히려 미국측의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마지막으로 한미FTA와 관련 양념처럼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 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당연히 드는 의문은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 왔는가. 대미 군사안보적 영구종속이 현재와 같은 중미(中美)쟁패기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과연 참여정부의 구호처럼 ‘평화번영’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아니면 중미간 헤게모니 싸움을 활용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의 총외교노선으로 적합한 것인지 국제정치적 색맹이 아니라면 답하기 어렵지 않을 게다.

5. 한미FTA 예상초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지난 2월 2일 미무역대표부는 미무역촉진법(TPA)에 의거 한미FTA협상개시 선언에 앞서 미 상하양원에 서한을 보내협상자체의 전체틀과 협상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한미FTA는 대략 20개 전후의 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과 최근 체결한 FTA의 내용 및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히 짚어 두자.

- 1) 상품무역: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여기에는 당연히 농산품에 대한 각종의 수출보조금, 관세율쿼터(TRQ)등도 포함되어 있다.
- 2)통관업무, 원산지증명, 집행협조: 미국제품이 신속하고 적기에 통관되게끔 한국 통관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특히 원산지증명문제는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FTA를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위생 및 검역조치: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거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끔 한다.
-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WTO “무역에 관한 기술협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기술 표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 5)지적 재산권: 미국내법과 WTO "무역관련지재권협정"의 기준에 맞게 지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한다.
- 6)서비스무역: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와 기타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며 필요하다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별규정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추가 규정을 요구한다.
- 7) 투자: 미투자자에게 미국내법 원칙과 관행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의 투자장벽을 축소 혹은 제거한다.
- 8)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적용의 면제등을 요구한다.
- 9)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와 관급계약에 미국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한다.
- 10)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 11)경쟁: 한국의 사업관행, 특정 독점기업, 공기업에서의 경쟁제한을 제거한다.
- 12)무역구제: 한국산 제품의 수입증가가 미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위험의 실질적 원인이 될 때 관세특혜의 일시적 폐지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고, 한국이 문제제기해 온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는다.
- 13)환경: 통상과 환경정책이 상호지지할 수 있게끔 한다.
- 14)노동: 한국이 무역 및 투자장려책의 일환으로 노동법상의 보호조치를 약화 및 축소하지 않게끔 보장하도록 한다. 물론 위 환경과 노동조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환경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5)국가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방대한 양에 달하는 위의 각 조항들은 한미FTA를 통해 조문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 조항이 갖는 경제적 효과와 한국사회 각 부문에 미칠 자세한 영향분석은 당장 여기서 가능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체결한 거의 모든 통상협정중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신자유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사실상 전부문을 포괄하게될 이러한 협정이, 명실상부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경제통합협정이 한일합방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체결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아울러 각 조항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한미BIT협상 당시 미국의 BIT표준안을 한미협상의 텍스트로 그저 묵수했었던 전례로 볼 때, 그 당시에도 정부측은 “BIT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협정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경험으로 볼 때, 이 번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해 “주는” 것 만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노릇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미국의 협상전략, 치밀한 계획과 준비, ‘국익’에 대한 명료한 이해, 미의회-업계-미무역대표부사이의 유착에 가까운 공조, 북핵문제를 비롯한 풍부한 압박카드, 탁월한(?) 영어구사능력(!) 이 모든 것에 한국의 협상팀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족달불급이다. 바둑으로 치자면 초단이 9단에게 4점을 깔아 주고 대국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비록 시간에 쫓기는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해 이미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6. 한미FTA의 몇 가지 법률적 문제

(1)재판관할권 문제

한미FTA는 양자조약이기 때문에 체결대상국 조건에 따라 조약문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경제력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 역시 그 구체적 내용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무역/투자분쟁 해결절차는 해당국의 재판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이미 국제통상분쟁의 경우 WTO는 분쟁해결메카니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GATT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NAFTA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DSU)>등과 같은 별개의 분쟁해결제도를 갖추고 있고, 이는 대다수 양자간 통상협정에서도 원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으로는 NAFTA의 경우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원적인 분쟁해결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첫째로 통상적인 분쟁의 경우와 관련 정부대 정부간 차원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둘째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같은 특정 조치나 투자 및 금융서비스와 같은 특정 부문에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정부조달, 지적권, 원산지결정등의 경우에는 체결국의

국내분쟁해결절차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 및 노동과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를 들 수 있다.⁵⁾ 여기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이 위 두 번째 투자분쟁 해결 메카니즘과 관련된 NAFTA 11장이다. '국제법상의 '반혁명'이라 할 NAFTA 제11장(투자)은 이후 1990년대 후반 이 NAFTA 11장의 세계화를 의도한 '다자간 투자협정(MAI)' 반대 캠페인 당시 국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시킨 원인가운데 하나였다. 투자자 대 투자유치국 국가사이의 분쟁해결절차가 문제였다. 다시 말해 UN인권헌장을 제외하고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개인은 투자자를 의미한다.

이미 과거 미 BIT의 표준안(BIT 1994)에서 성문화되어 양자간 투자협정에도 적용된 이 조항은 나아가 미 BIT 신 표준안(BIT 2004)에 와서 더욱 확장되고 체계화되기에 이른다. 이미 한국에서도 과거 BIT 논란과정에서 한국 검찰 실무진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던 이 조항은 분쟁발생후 일정한 기간 경과뒤에도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제3심급 특히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실상 투자유치국의 현지법원을 우회하여 즉 이를 무력화시키는 문을 열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투자유치국 국가와의 재판관할권(jurisdiction)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 사안이 한미FTA의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각별히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칠레FTA, 미-싱가폴FTA의 경우와 미-호주FTA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투자자 대 투자유치국 국가사이의 투자분쟁해결절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a) 미-호주FTA 협정문 제11장 16절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협의'에 따르면 그 1항에서 '채약국 일방의 투자자는 본 장의 범위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의와 관련 중재(arbitration) 회부를 허용'한다는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협정문 제21장에 규정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협의와 다음으로 정해진 '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패널(panel)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ICSID등을 통한 분쟁해결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b) 미-싱가폴FTA의 경우는 제15장에 별도의 투자관련 장을 설치하고, 이 장의 Section C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에서 사건발생후 6개월이 지나면 투자자는 ICSID에 제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협정문 제15장14절5조)

(c) 미-칠레FTA의 경우에는 협정문 10장의 SectionB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에서 투자분쟁이 협의(consultation)와 협상(negotiation)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투자자는 ICSID를 통해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협정문 제10장 15절5조)

실제 ICSID에 제소된 중재건의 상당수가 재판관할권에 대한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즉 사적 당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한 제소권의 인정여부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튼 미국이 최근 체결한 3개의 FTA를 놓고 보더라도 협상국에 따라 미국은 매우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칠레, 싱가포르의 FTA상의 투자분쟁해결은 미국의 BIT 2004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투자분쟁절차 문제는 한편으로 채약국 일방 정부의 사법주권을 공동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도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중남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초국적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 놓은 FTA 투자 분쟁조정절차는 FTA의 고비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FTA의 투자분쟁메카니즘을 통해 투자자 내지 기업은 채약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할 대목이 투자자는 국가를 제

5)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울: 법무부, 2003, 357-8쪽.

소할 수 있어도, 그 역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를 경과해야만 한다는 점이 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자본 내지 기업의 '전지구적 쿠데타'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전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ICSID 투자분쟁 사례들이다.

FTA의 '비용'과 관련 특히 이러한 방식의 분쟁해결절차에 내재한 고위험성은 아래에서 잘 드러난다. 60년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 까지 ICSID에 의해 처리된 투자분쟁건수는 총 86건이며, 2004년 11월 말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총 85건이다. 그런데 계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건,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 30건, 2004년(11월말) 25건 등 2000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투자분쟁이, 매달 1-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의 개도국들이라는 점이다. 총 85건중 32건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 칠레 3건, 콩고 3건, 그 외 몽고,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가봉 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국가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국들이 그 대상들이며,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처럼 ICSID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FTA/BIT의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 정부 및 해당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률시장 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문제

한미FTA는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국민정서법'적인 반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률시장 개방의 폭과 수준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미리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경우 NAFTA 부속서 1210.5규정(전문직 서비스) B조에 따라 양허안을 제출하고, 미,캐나다,멕시코 3국은 이후 1996년 관련된 모델규칙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3가지가 특히 쟁점이 되었다. 첫째, 외국법자문역의 업무범위문제이다. 위 모델규칙안은 이와 관련 '소송'업무와 관련해서는 주재국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일반업무 및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허가 범위내에서 자문을 할 수 있고, '중재'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활동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주재국에서의 '제휴'문제이다. 즉 외국법자문역이 1)다른 외국법자문역에 고용되는 것이나, 주재국의 법률가와 로펌에 고용되는 것 2)이 자문역의 출신국 소장(junior) 법률가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NAFTA 3국이 연합의 형태에 대한 다른 주요한 규정에 합의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외국법 자문역은 현지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법률가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현지 법률가를 고용하거나, 다른 법률가에 의해 고용되거나 또는 이들과 동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협상시 미국은 아마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률시장 개방을 애초부터 반대해 온 멕시코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멕시코 법률가에서 외국법 자문역을 허가하는 나라에게만 멕시코도 활동을 허가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들 수 있다.⁶⁾

결국 이렇게 본다면 사실 법률시장을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실제 이해당사자의 교섭력과 발언권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이해당사자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정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한미FTA의 위헌소지와 통상절차법의 문제

6) 같은 책, 230쪽 이하.

2005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FTA체결절차규정>과 이 규정이 원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엄존함에도, 현재 한미FTA는 사실상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 이 절차규정의 12조를 보자.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①위원장[FTA추진위원회 위원장 즉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함-인용자]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조는 인용자)
②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자면 한미FTA는 사실상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없이 즉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 2월 2일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소집되었다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는 상당한 절차상의 흠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절차민주주의적 최소조건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대한 법률이 불비하다는 것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걸맞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2004년 11월부터 약 1년여에 걸쳐 <통상절차법 제정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그 관련 법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민주노동당안과 통합해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이다.

이와는 별개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동의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현정부의 FTA정책이 헌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내포한다. 또한 이는 한미FTA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legitimation deficit)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통상절차법'의 헌법적 근거와 아울러 한미FTA의 위헌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그 헌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FTA는 헌법60조 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해당된다.⁷⁾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행사(헌법73조)하고, 국회는 헌법60조1항에 의거 여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현행 헌법은 통상조약과 관련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국회의 '동의권'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헌법 60조 1항은 조약의 '체결 자체에 대한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라기 보다 체결 '과(and)' 비준 그 각각에 대한 동의권이라는 의미 즉 자구 그대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조문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 60조 1항에 표현하고 있고, 헌법통설이 인정하는 것처럼, '체결'과 '비준'은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이다.⁸⁾

또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부 제1절 조약의 체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약의 체결이란 전권 대표의 임명에서 조약의 발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외교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광의의

7) 헌법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中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8) “헌법 제 73조가 ‘체결’, ‘비준’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체결’은 그것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전권대표의 지명·파견, 조약내용에 대한 기본방침지시 등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체결’에는 마땅히 ‘비준’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허영, <한국헌법론>, p.172)

체결), 현행 헌법에 ‘비준’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체결’이란 전권대표의 임명, 조약문의 채택, 정본인증(서명), 조약문에 대한 기속적 동의(서명, 조약문의 교환, 비준·수락·승인, 가입)중에서 전권대표의 임명에서 협상, 협상완료 및 서명(조인)까지의 과정을 체결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국회동의권에 대한 현재의 관행은 조약에 대한 서명(기명조인)이 완료된 이후 즉 ‘사후적’인 행위로 이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⁹⁾

그렇다고 할 때 국회동의권과 관련된 현재의 관행과 헌법이해는 1) 국회의 동의권이란 것이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한** 동의권을 의미함에도 실제로는 후자 곧 비준에 대한 동의권 즉 ‘반쪽’ 동의권으로 이해되어 협상과정에 대한 입법부의 동의권이 전적으로 간과되고 있고, 2) 그나마 ‘반쪽’ 동의권도 조약 체결 이전에 다시 말해 ‘기명조인전(記名調印前)’에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사실상 사후적 승인으로 전도됨으로써 그 위상은 더욱 약화되어 있으며, 3) 그 당연한 결과로서 국회동의권의 입법취지라 할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의 대상과 관할범위는 협상전권대표의 임명, 협상, 서명, 조약문의 교환 즉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이전 단계까지의 외교에 대한 일종의 입법불비상황을 타개하는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국회동의권제의 원래취지에 맞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의무를 지우는 조약’(헌법60조1항)과 관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정부에서 주장하듯 진정 FTA의 이른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협상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나아가 통상정책의 실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매우 긴박한 요구이다.

과거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과 같은 ‘도덕적 이슈’와 비교해 국제통상 문제는 그 장기적인 파급력과 충격이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진영 역시 통상문제와 같은 하드코어 이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대안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FTA추진 절차에 대한 정정을 통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적어도 최선은 아니지만 실행가능하고 합의가능한 차선이자 출발점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국가규제로부터 시장의 분리 곧 탈규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해 왔다면, FTA를 매개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 곧 역규제를 지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공동화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공동화이다. 더군다나 WTO라는 다자틀에서 개도국들이 ‘수의 논리’에 힘입어 그나마 틈새를 노릴 수 있었던 반면, 양자간 내지 지역간 FTA체제 속에서 해당 국가는 그런 자유가 없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동의에 뿌리박은 새로운 국제통상 절차법의 마련이 의미 있는 방과제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6. 맺는 말

엄밀히 말해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칠 충격은 사실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그

9)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사전동의라야 한다. ‘사전’이라 함은 기명조인전이라는 뜻이다. 조인전일 때에만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국회동의제의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 p. 838)

효과분석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증속, 서비스산업 적자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증속의 항구화등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익이 배타적으로 4대 재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는 명실공히 한국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다.

사실상 협상의 포기여 다름 아닌 스크린쿼터문제의 처리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가 보인 졸속성, 국민 다수의 합의는 고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최소 동의조차도 부재하다는 점, 나아가 현재 발의중인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최소한의 안전판 조차도 불비하다는 점, 미국내법상의 시간표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라는 한국측 정치일정 여러 정책환경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한미FTA는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하며, 아울러 포괄적인 그리고 새로운 통상전략의 바탕에서 재배치되는 것이 옳다. 또한 통상 관련 제도정비와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통상관련 양대 신입법과 같은 안전판 정비는 이것의 필수조건이다.

2003년 5월 현재 GATT/WTO에 통고된 FTA는 총 126건이며 이중 미국과 체결한 FTA는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양적으로 한국정부가 말하는 FTA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실 미국식 스탠다드 이상은 아니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FTA는 체결 국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사정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는 지극히 다양하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의 FTA인 NAFTA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문화산업과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체결한 FTA에서 미국은 모든 예외의 극소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자국이 체결한 FTA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즉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다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통합이 아니라 해체의 벼랑으로 내 몰아갈 그런 미국식 스탠다드에 입각한 한미FTA는 분명 우리의 길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FTA와 통상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을 최대 졸속으로 - 1년(!)만에 - 처리하고자 하기에 더욱 그렇다.

[2부 발제]

불타는 필름의 年代記 또는 聯隊記

이마리오

0. 제안배경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고-그것도 건국 이래 단 두 번 했던 것을 한해에 해버리고-, 쌀비준안을 농민들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고, 집회에선 시위대를 때려 죽이고, 몇십억 비자금을 건네준 삼성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황우석에 대해선 배타적 민족주의로 여론몰이하고, 평택에선 농민들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새만금사업은 다시 시작하고, 천성산 터널은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너무나 사건들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광기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건들이 많기에 너무도 빨리 그리고 쉽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편파적이고 과편적으로만 보도되고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도대체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10대 사건류 식의 보도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사람으로, 그리고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로 이러한 사건들을 엮어 우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여 프로젝트 작업-이름을 뭐라고 부르든간에-을 제안합니다.

-제안서 초안 중에서

1. 왜 프로젝트 작업인가?

위에서 언급된 사건들을 누군가 혼자서 작업하려고 한다면 2-3년의 기간은 족히 필요할 것이며 무수히 많은 제약들과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들과 한계를 어느정도나마 극복할 수 있는 작업방식이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다양한 사건들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경향 혹은 흐름들을 그 사건의 중심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모아내는 방식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단기간(?)에 해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작업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이전의 프로젝트 작업(이주 프로젝트, 국보철 프로젝트, 신자유주의반대 프로젝트)의 연장선(각 시기마다 긴급하게 혹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입니다.

- 제안서 초안 중에서

2. 작업방식에 대하여 - 하나의 장편docu로 작업하자. 왜?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전의 프로젝트 작업이 각 연출자들의 작품을 동일한 주제 혹은 소재를 다양한 입장과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펼쳐 놓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이 프로젝트의 경우 펼쳐진 작품들을 하나의 흐름을 갖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각 연출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로 보여질 때 갖을 수 있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모자이크 혹은 각 부분을 훑어 보다보면 어느 순간 한국사회의 지형도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 기획서 초안 중에서

이 작품은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의 여러 단면들이다. 과거에 벌어졌던 혹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의 단면들을 모으고 재조합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어떠한지 그려보고자 하는 첫번째 시도이다.

- 기획서 중에서

3. 배급활동에 대한 계획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급부분이다. 보다 적극적인 배급에 대한 고민이 프로젝트 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동시다발적이고 집중적인 배급행동을 통해 입체적인 상영회 활동 모색
- 긴급히 요청되는 상영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네트워크 토대 마련
- 한미 FTA 저지투쟁과 관련한 사회운동 진영의 대응과 함께 갈 수 있는 상영회 모색
- 5-6월 집중 상영 기간 설정(5월 15일 - 6월 10일)
 - 1차 : 기존의 공동체상영운동네트워크를 통한 거점 상영회 확보(20여곳)
 - 2차 : 웹 홍보와 사회운동 단위를 통해 진행되는 상영회 확보(20여곳)

4. 내가 프로젝트 전문 감독(?)이 된 이유

독립영화 진영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독립영화가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연대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구성원 중의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모여져서 이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믿는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독립영화를 하는 이들은 독립영화로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일반적인 질서 안에 포섭된 구성원이 아닌 경계에서 있는 애매한 혹은 자유로운 위치-는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싫은 혹은 체질적으로 안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같은 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두번의 프로젝트 작업-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을 제안했고, 두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다.

[2부 발제]

한미FTA 국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행동 계획

_조동원(미디어운동활동가)

[edit]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활동가 워크숍

1st: 한미FTA반대 독립/대안/공동체 미디어 & 문화 활동가 워크숍

- 때: 4월 10일(월요일), 저녁 7시 ~ 9시 / 곳: 미디어엑트 대강의실

- 워크숍 이후 관련 기사: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활동가 워크샵' 진행(참세상, 20060411)

- 함께 평가해 보아요: 공동 기획 및 평가 페이지 가기 1st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 활동가 워크숍

독립영화인 워크숍 <신자유주의와 독립영화>

- 일시: 4월 12일 (수) 4시

- 장소: 미디어엑트 대강의실

- 주최: 한국독립영화협회vud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미FTA 대응 지역 활동가 회의

:

- 진주: 한미FTA저지 영상 상영회 및 활동가 간담회

: 함께 기획해 보아요: 한미FTA저지 영상 상영회 및 활동가 간담회 (기획 초안이 나오는 대로...)

: 일시: 4월 세째주 / 장소: 진주 / 주최: 독립미디어센터 진주

2nd: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활동가 워크숍

- 함께 기획해 보아요: 공동 기획 페이지 가기 2nd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활동가 워크숍

- 때: 4월 24일(월) or 26일(수요일), 저녁 6시 30분 ~ 10시

- 곳: 미디어엑트 대강의실 or ?

[edit]한미FTA반대 영상제작 협동과정: 제작 소스 및 정보 공유

기획: 한미FTA반대 영상제작 협동과정: 공유원칙과 쟁점 토론

실행: 한미FTA반대 영상제작 협동과정

영상제작 협동과정의 내용: 각 부문별 정보, 자료들, 협상 추진 동향, 뉴스기사, 사진, 영상 등

[edit]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행동 계획

[edit]협상일정 및 투쟁계획에 따른 대중 영상캠페인 전략

협상일정 및 투쟁일정에 따른 미디어 선전(컨텐츠의 제작 및 배급) 계획 매트릭스

범국본 투쟁 계획(200604): 다운로드 -

FTA 대중 캠페인 전략: 가십, 주의집중, 각성, 쟁점화!(200603) - 다운로드

[edit]대중 선전/교육 영상물 파일럿 프로젝트: 개요

참고 사례들

: 뉴스 프로그램 형태 democracy now

: 공익광고 형태 Bush in 30 Seconds 중 ...

: 고급정보 형태 EBS의 지식채널e

[edit]대중 선전/교육 영상물 파일럿 프로젝트: (광고)패러디

한미FTA반대 교육/선전 미디어 콘텐츠제작을 위한 FTA생활백서: FTA생활백서

패러디 영상 샘플1: 대략난감!

패러디 영상 샘플2: 제작기획 회의 - 4월 13일(목) 오후 3시, 영상원 (참여하실 분 메일주세요: jonairship@gmail.com)

이후 계획: 광고 패러디 아이디어 및 시나리오 공모전 + 다양한 제작 주체들의 제작 프로젝트 추진

[edit]대중 선전/교육 영상물 파일럿 프로젝트: 릴레이 인터뷰(참세상)

일단, 워크숍에서 상영했던 농업 부문 영상은

mms://soli.cast.or.kr/cham/report/06/antifta_1_farming.wmv를 주소창에 치면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 후 참세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농업, 보건의료, 법률, 지적재산권, 교육, 여성, 방송 정도 될 듯.

[edit]교육선전 영상물 제작

계획: 참세상, 스튜디오아이스크림, 한독협 등

[edit]한미FTA 주간뉴스

아이디어: 속보 영상을 포함해 다양한 단편 영상물들을 묶고, 대안적 뉴스 형식으로 종합보도하는 주간 프로그램 제작 및 액세스

[edit]한미FTA반대 투쟁 - 장편 다큐멘터리

사전 기획 단계 필요

[edit]한미FTA저지 공동체 상영운동 계획 및 배급/유통/선전 전략

한미FTA저지 공동체 상영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관련 영상 프로그래밍 & No-FTA 관련 영상 프로그램의 배급/상영 전략 등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에 맞는 배급과 유통

: 배급과 유통에 대한 기획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제작

: 이동하는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생각해 보면...

- 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등 ... 운수교통노조들과 연계
- 스티커 부착, 입을꺼리 제작 배포
- 라디오 프로그램의 배포(테일 등)
- 공익광고 등의 비디오 프로그램 배포...

: 전국적 상영배급 담당: 게릴라 투어 버스 포함

: 퍼블릭 액세스(열린채널에 대한 용단 액세스 시도 등등등)

[edit]한미FTA저지 라디오 행동

인터넷(podcasting 등)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 기존 지상파라디오방송국(액세스) /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안내 방송(?)

한미FTA 저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기획 등: 한미FTA저지 라디오 행동

[edit]한미FTA반대 웹(인터넷 미디어) 활용 전략

여론 환기와 대중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논쟁-담론/배급의 필요성

(진보) 블로그 활용, 메타 블로그 기획, 인터넷 언론 네트워크의 계획, 범국민 웹사이트 기획 등

미디어문화행동 사이트 활용: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행동 + 공개서버(노동넷)

대중 참여 제작/유통 모델: 생산-협동조합 - 웹을 활용한 대중 참여(기획,제작,배급,상영) 실현?

: 웹을 활용한 대중 참여(기획,제작,배급,상영) 실현.

: 참조

- 다큐멘터리 <월마트> 제작과정과 배급전략 / 헤리
- EBS의 “지식채널 e”의 시청자지식제안 게시판

독립미디어Online플랫폼의 구상

- 내용: 개인방송국 솔루션 혹은 플래시 미디어 서버 등 최근에 수집/구상된 아이디어들 소개하고, 생각들 모아보기

현재 사용가능한 툴들 최대한 활용해서 비슷한 거 시도해볼 사람 조직하면 이후 개발 작업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그 자체로 소개/활용에 도움될 것.

- 1st 워크숍 발표자료(다운로드): 프로젝트 기획
- 별도 위키 페이지: 독립미디어Online플랫폼

[edit]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한 미디어/문화/정보통신의 국제연대

활용: 미디어문화행동 영문 페이지 or 베이스21 웹사이트

[edit]한미FTA저지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의 행동은?

진보넷, 노동넷, 정보공유연대, IT노조... 등이 모여 뭔가 해보면 어떨까??

참고: 정보통신분야의 한미FTA저지행동을 준비합시다 : 노동넷 위키

[edit]거점의 필요성 토론: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

NoFTA-IMC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

한미FTA 국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행동 계획 중 관련 내용 참조

[edit]메일링리스트: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활동가 온라인 소통

mcaction@list.jinbo.net

메일링 리스트 가입/탈퇴/아카이브: <http://list.jinbo.net/mcaction>

[edit]관련 웹사이트들

한미FTA반대 교육/선전 미디어 콘텐츠제작을 위한 FTA생활백서 팀블로그 가기: NoFTA

한미 FTA 관련 기사 및 자료 모음 참세상 페이지

한미FTA와 지적재산 : 정보공유연대 ILeft 위키

정보통신분야의 한미FTA저지행동을 준비합시다 : 노동넷 위키

독립영화 프로젝트 -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프로젝트 블로그

[edit]

한미FTA와 관련한 담론/분위기 둘러보기

한칠레FTA 때처럼, 한미FTA도 불쌍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정도의 대중적 인식

스포츠 애국주의의 여론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현 국면의 대중적 설득 담론 구도

: 국익 vs 공익(공공)의 대립 구도가 될 수 있음.

: 국익이 아닌, 공익(공공)의 담론이 너무나 취약한 상황임.

: 한미FTA 국면을, 국가의 탈규제를 넘어서 역으로 자본이 국가를 규제하는 단계(이해영)로 설정할 경우, 공공성 확대에 있어서

국가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는 공익(공공)의 담론의 형성이 필요한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운동 진영 및 대응 담론에서조차 강대국 vs 약소국의 구도 설정

: 남한독점자본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이 축소될 수 있음. 하지만 한미FTA를 통해 남한독점자본이 갖는 이해는 무엇인가?

: 이미 초국적 자본이기도 한 남한독점자본의 문제, 특히 이로 인해 민중의 삶은 어떻게 과탄날 것인가? 규명해야 함.

[edit]한미FTA 대응(저지, 반대, OO) 투쟁의 목표는? 그걸 어떻게?

투쟁의 목표(이런 게 아닐까?)

: 최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에 의한 한미FTA 협상의 폐기, 더 나아가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일반에 대한 반대 여론의 확산과

대안 세계화를 위한 공공영역의 재구성 의제화

그렇다면, 어떻게?

- : 이 투쟁의 목표를 위한 대중 담론 투쟁 필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대중 담론 투쟁과 현장 투쟁의 의제들을 담론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
- : 지배적 주류 미디어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일삼고 있음.
보다 면밀한 현재의 지배적 주류 미디어의 이해관계와 관점/위치를 분석해야 함.
- : 지배질서에 대항하는 소수 미디어는 대안/대항/저항의 현장과 목소리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대항) 공공영역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그 반대가 갖는 추상적인 내용을 아! 바로 이런 거구나!? 곧바로 보여줄 수 있는 현실 재현이며,
미디어 자체가 대중 운동 주체를 조직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미디어를 각각의 독립 미디어, 대안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 부를 수 있음.
- : 지배적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독립/대안/공동체 미디어를 통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popular communication) 실천을 통해
반대 여론의 확산과 대안 세계화를 위한 공공영역의 재구성을 의제화할 수 있음.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
- : 대중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전체 사회운동 진영은 어떠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질 것인가?

- [edit]한미FTA 국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행동 계획은 어디서?
전체적으로, 한미FTA 국면에서의 투쟁과 실천 과정은 곧바로 우리 운동의 재구성으로...
- : 정세 변화 및 분석에 따라 개혁 세력의 동요와 함께 사회운동/시민운동 진영의 분열과 새로운 연대가 예상됨.
 - : 한미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는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재구성 과정이 될 것이고, 이와 맞물려 미디어/정보통신/문화 운동의
통합적 연대의 구체적 실천을 통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급격한 발전 혹은 그동안 쌓아온 것도 허물어지는 좌절의 역사적 시기가 될 것 같음.
그런데, 현재(200604) 어느 단위에서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 정책포럼,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문화예술 공대위, 범국본,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 등.
이를 위한 논의틀 구성 필요 + 시급한 직접행동의 추진
 - : 하지만 이러한 논의틀이나 조직 구성 및 재구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 논의틀을 구성하는 동시에 시급히 요청되는 미디어 활동들은 곧바로 기획하여 추진해나가야 함.
 - : 특히, 한미FTA 반대투쟁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4월, 그리고 5월(초반)은 최대한 대중적인 차원까지 교육/선전 활동이
각 부문, 각 지역, 각 현장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독립/대안/공동체)미디어의 역할과 사업은 무엇인가?
뭔가 조직되는 흐름이... 파편적? or 아래로부터의 횡적인 네트워크로?
 - : 여기저기의 정책회의, 전략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온라인소통 등이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과정이면서,

다른 한편 2% 부족할 경우 과편적이고 직접행동/실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여러 다양한 단위와 테이블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투쟁목표 및 방식, 의제설정, 조직구성 등)을 함께 그려나가며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중앙과 부문이 조직되는 한편, 현장과 현장이 횡적으로 연계되어 곧바로 가능한 사업과 활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수 있음.

[edit]한미FTA 국면에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요소들

전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초점들

: 독립, 대안, 공동체 미디어 활동(대안적 목소리/현장/담론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은 사회경제적이고 문화정치적인 공공영역(공적 담론)에서 격돌하며, 대항 공공 영역을 형성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사회적 실천. 그래서...

: 주류 언론/미디어에 대한 개입/비판/대항/거부

: 대시민 대항 이데올로기 선전 활동

: 청소년/년 및 (대)학생 대중, 노동자/농민/서민 대중에 대한 정치교육

: 한미FTA 반대 투쟁 및 다양한 사회변혁 투쟁 의제들에 대한 대중적 담론 소통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지형과 대응

: 주류(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포탈): 비판(모니터링) & 활용(내부 동력)

: 독립/대안: 속보, 교육선전, 심화보도, 지식, ... 주류 언론으로서의 역할까지...

: 공동체: 지역 소통, 부문 소통, 대중의 자율적 커뮤니케이션

: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자체 이슈

- 한미FTA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산업&문화)에 대한 영향 분석과 정책 대응

한미FTA 국면에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 구도

: 지배적 공공영역 & 대항 공공영역

: 지배적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활용

- 조중동 등 신문, KMS 등의 방송, 인터넷 포털 등

- 활용 예: KBS 스페셜의 한미FTA 3부작 제작계획(전국민보기운동?)과 다른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기획 조직화 등

: 독립/대안/공동체 미디어의 100 + 2% 활용 전략

- 독립/대안 미디어: 방송(TV,라디오), 영화, 인터넷, 음악, 인쇄 등 모든 포맷, 채널 및 콘텐츠 장르의 활용

- 정부-자본-언론의 동맹이 지속되는 조건에서라면, 대안 미디어가 대중 여론의 주류 미디어가 될 수도 있음.

한미FTA에 대한 공정한 보도, 표현의 자유 보장, 대중적 알권리 충족 등

[edit]한미FTA 대응(저지, 반대, OO) 방향과 현황: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중심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전농을 중심의 대응 단위(민중연대)

: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를 비롯한 중층적 대응 전선 구축

: 한미FTA 정책포럼

: 한미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한미FTA 저지 문화예술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등 여러 공대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3월 28일 이후 총괄적 BODY

: 범국민 대회 등 독립/대안/공동체 영역의 미디어 + 정보통신 + 문화 운동을 가로지르는 행동네트워크의 필요성

: 공대위 중심의 조직화가 갖는 한계(운동 영역 간의 직접적 연계 부족, 주류 영역 - 사회운동-시민운동 간의 행동 기획의 경험 부족)를

넘어서는 독립적 통합 네트워크

: 이러한 독립적 통합 네트워크(예컨대,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행동[가]”)는

- 넓게는 범국본, 가깝게는 시청각 미디어 및 문화예술 분야 공대위와 공동 사업을 하던 서도,

- 조직적으로는 독자성을 갖으며 미디어 + 정보통신 + 문화 운동을 가로지르는 행동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도 있음.

한미FTA 국면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행동 계획을 논의해 나가는...

: 현재 구도에서 볼 때 한미FTA 국면에서의 전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행동 계획 논의들은 여러 공대위 구성과

범국본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미FTA 정책포럼 차원에서 기획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후 범국본 발족 이후 어느 시점에서 범국본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팀과 같은 것의 구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음.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미디어문화행동의 거점 -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가칭) 구축

: 대안/독립/공동체 미디어 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직접행동의 네트워크 & 네트워크

이하의 내용은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획메모임.

[edit]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 개념

No! FTA 독립미디어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NoFTA-IMC

NoFTA-IMC 개념화의 세 축

: 일정하게 조직된 전문적 독립 미디어 활동가의 결집

- 독립/대안/공동체 미디어의 기획-제작-배급-유통-상영/방영의 시스템 구축

: 조직화된 대중 및 일반 대중(the popular)의 자율적 커뮤니케이션 실천의 수렴

- 한미FTA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심”과 “자각”과 “행동”에 대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 매개

: 영문(english) 작업을 통한 국내외 뉴스와 독립 미디어의소통을 통한 국제연대 실천

- 한미FTA와 FTA,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반세계화운동(대안세계화운동), 국제 공동행동과 국제연대의 공진화

[edit]전체 미디어운동 진영과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가)의 연관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독립영화 제작자, 독립적 영상 제작자 및 집단

: 한미FTA가 시청각 미디어, 공공적 영상문화 차원에 미칠 파괴력에 대한 분석과 인식을 통해 전체 미디어운동 진영의 초기 조직화의 주체가 되고 있음.

: 행동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가) 구축의 핵심 주체

: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가)를 하나의 조직 틀로서가 아닌 다양한 행동 네트워크의

교차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초기 네트워크 역할의 담당

미디어액트 및 지역 미디어센터(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한미FTA 국면에서 미디어액트 및 지역미디어센터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짐.

: 한편으로는 독립/대안/공동체 미디어 활동, 한미FTA반대 미디어행동에 대한 물질적이고 정책/전략적인 지원이나 근거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 다른 한편, 한미FTA를 전후로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초토화를 막아낼 수 있는 미디어 공공성,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호와 실현의 상징적 실체이자 보루의 의미를 지님.

: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는 미디어액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 공유와 다양한 상호 지원을 형성할 수 있고, 지역 미디어센터(들) 및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차원의 한미FTA 반대투쟁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실천을 추진해 갈 수 있음.

진보넷, 노동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운동

: 진보적 사회운동, 노동운동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운동의 핵심 네트워크가 되어온

진보넷, 노동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고도화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미디어(디지털 뉴미디어) 환경 변화가 겹쳐지면서, 사회운동의 정보화나 노동 미디어, 그리고 정보통신운동 자체의 새로운 재구성의 시도하고 있음.

: 한미FTA가 미칠 통신자본의 전면적 투자(투기)와 통신시장 개방의 문제,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정보지식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 억압,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불평등의 가속화,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정보인권예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보장의 후퇴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 그 어느 것보다 효과적인 대안 미디어로서 역할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운동의 다양하고 새로운 실험들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대안 세계화를 위한 운동으로 조직해 왔음.

: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는 이러한 독립적 인터넷 미디어운동의 역량, 인프라, 대안적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사적 투쟁의 성과들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독립미디어센터의 모델 사례와 다양한 활동은 곧 정보통신운동과 그 네트워크의 새로운 재구성을 위한 결정적 근거가 될 것임.

민중언론 참세상 및 진보적 인터넷언론네트워크

: 참세상을 포함한 진보적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진보적 인터넷 미디어(internet media)로서

곧바로 운동 주체들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 접촉면을 가지며, 대항적 공공 담론을 형성함.

: 대안적이면서 전문 저널리즘에 기반하면서도 인터넷의 자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실천적으로 활용하면서, 한미FTA반대와

대안 세계화를 위한 대항 공공영역의 뿌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 지역 미디어운동(센터) 및 그 네트워크와의 연계,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대안/독립/공동체 콘텐츠의 유통과 상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미디어문화행동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한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행동의 플랫폼이자 상설적인 활동가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음.

: 부산APEC과 홍콩WTO 투쟁에 대한 후속 작업(영상제작 등)을 진행하는 한편, 누구나 행동하고 참여하고 조직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한미FTA 반대 미디어문화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하여 한미FTA 국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미디어와 문화 행동의 전선으로서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음.

: 즉,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는 현 국면에서 “미디어문화행동”의 실현 형태이고, “미디어문화행동”이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로 전환되는 방식이 아니라, 현 시기에 이에 집중하는 것임(“미디어문화행동”은 일반적 미디어/문화/정보통신 운동 활동가 네트워크로서

한미FTA 이외의 자체 사업과 활동이 지속되기도 함).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문화예술 공대위,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공대위

: 미디어, 문화, 지적권 등의 각 직접 행동 사업들의 횡적 연계로서의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를 전유할 수 있음.

범국본

: 범국본은 한미FTA "저지"와 반대를 위한 운동의 대중적 대표체, 전선체, ...

: 범국본 같은 BODY가 없다면, 아래로부터의 흐름조차 어디로(어느 위로) 향할지 모르게 됨.

: 하지만 파탄의 괴물 한미FTA의 공분과 공명의 분출은 차이와 다양성, 독립과 대안의 목소리/행동/담론/실천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단일 전선체를 통해서만 수렴되기에는 (언제나 그랬듯) 한계를 가짐.

: 따라서 "한미FTA 독립미디어센터"는 범국본과 상호의존적인(inter-dependent) 관계를 맺으면서도,

늘 그렇듯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일(independent) 뿐만 아니라 범국본으로 대표되는 운동체에도 비판적 거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edit]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 대략적인 그림

NoFTA-IMC 활동가 워크숍

: 정례적이고 공개된 NoFTA-IMC 활동가 워크숍(2주 1회)을 통한 총화와 조직화

: 정세토론 + 각 활동 기획/토론/공유/평가 + 미디어 전략 토론.

: 언제나 새로운 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

: NoFTA-IMC의 전체회의를 위와 같은 활동가 워크숍으로 진행함.

활동가-대중 소통 체계

: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내부 소통보다는 웹사이트를 통한 개방적 소통 활성화

: 다양한 미디어행동 및 연대투쟁을 위한 아이디어/활동/행동/프로젝트의 개방적 제안 방식 구현

학습/연구 역량의 확보/유지/연계

: 정세, 미디어 전략, 미디어 전술,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스터디

- : 각 제작단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양 배치
- 지배적 주류 미디어 비판과 대안/독립/공동체 미디어의 제작/배급/유통/상영/방영
- : 지배적 주류 언론 미디어에 대한 개입/비판/대항/거부
- : 대안/독립/공동체 미디어의 제작/배급/유통/상영/방영 - 비디오, 라디오, 사진, 텍스트, 만화, 플래쉬, 음악 등
- 지역/현장 활동가 워크숍
- : 독립미디어행동은 반드시 교육활동과 병행해야 함. 워크숍 등을 통해 (예비) 미디어 활동가 (재)교육과정을 배치함.
- : 각 지역/부문/현장의 미디어문화행동을 위한 지원 활동
- : ex> 새만금투쟁, 평택투쟁, 지역/부문 공대위, 현장미디어 담당자 등
- "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의 한글 이외의 언어 웹페이지 작업
- : 범국본 등에서 구축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콘텐츠 차원에서 겹치지 않게) NoFTA-IMC의 콘텐츠에 맞는 한글 이외의 언어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음.
- : 1차 번역 작업을 통한 영어사용자 페이지 업데이트/링크
- : 2차 번역을 통한 스페인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등등 수 천 개여 언어 사용자 페이지 업데이트/링크
- 정보공유운동의 실현
- : 인터넷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사용을 원칙으로 함. ex> 비디오의 경우, wmv 사용하지 않고 flash로 변환(시간이 걸리겠지만)
- : 거의 모든 독립미디어센터에서 생산된 콘텐츠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원칙으로 함.
- [edit]한미FTA반대 독립미디어센터: 활동 영역
- 한미FTA반대 미디어/문화/정보통신 행동 계획

[3부 발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독립영화 실천단 설립을 제안하며

한국독립영화협회운영위원장 김이찬

1. 독립영화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인식

(1) 시청각미디어 제작물에 대한 통합적 이해 필요

주류영역에서 미디어 (콘텐츠 생산/원도우/규제방식) 통합경향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진영에서는 ‘독립영화는 영화나? 영상물이나?’ 라는 식의 초보적이고 소모적인 담론에 묶여, 새로운 실천 전망을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들에 의한 ‘원도우와 미디어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의 통합’ 경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 기술의 발전(?)에 따른 독립영화실천의 개별화/ 분자화 경향

독립영화의 (잠재적) 생산자는 급증하였으나, 새로운 의제의 개발과 전망의 소통은 없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독립영화운동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이라는 차원으로 위축되고,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문화적 상호작용, 혹은 운동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독립영화운동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 운동으로 위축될 것인가? 그렇다면, 사회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미디어 관련 공적영역의 부실함 / 독립 영화진영의 개입 취약

보통사람들과 작은 공동체들을 미디어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과 발언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와 실천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즉 시간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정치권력에서, 자본이 조종하는, 혹은 그와 공조하는 거대미디어 권력으로 급속히 이동했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독립영화진영이 개입한 사례들을 잠깐 돌아보면,

1) 재벌/관료/주류방송국 종사자 연합의 퍼블릭액세스구조 [열린채널]의 연성화/체제내화 욕망과 이에 대한 독립영화인들, 미디어 활동가들의 저항 (2005년 3차례의 분쟁)

- 삼성, 현대, 관료기구등의 지배력이 공영방송사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2) 지역방송사들의 [퍼블릭액세스 구조]에 대한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이에 대한 미디어 운동주체들의 대응

- 퍼블릭액세스를 ‘비전문 시민들을 이용한 영상콘텐츠 공급구조 (지역방송사들의 영리활동에 대한 보조)’ 정도로 위축시키는 조치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이 과정에서 독립미

디어 활동가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함.

3) 시청각문화 공적영역의 부실함

- 영화진흥위는 2010년까지 소위 'Next Plus'란 이름의 공공상영관을 전국에 100개 만들겠다고 (난데없이) 선언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으며, 최소한의 연구도 없다. 지금까지)

- 방송위와 문광부는 급작스럽게, 경쟁적으로, 각 지역도시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정부부처간의 관할권 다툼', '운영계획 없음', '산업활동의 연장이라는 인식', '화려한 겉모양', '해당기관 권료들의 권위주의적 개입 - 운영주체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억압' '사전 조사없는 선진국 시설 이식' 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그간 독립영화진흥영이 능동적 대응/혹은 개입을 못해왔다.

4) 고단했던 RTV의 혁신과 새로운 도전

2년여의 혼란기를 지나고, 독립영화진흥영이 그 운영에 개입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이 낡은 관행의 혁신이라는 과제는 남아있다.

5) [독립영화 전용관] 문제를 둘러싼 진통

- 영화진흥위는 한독협 측에 '극장임대에만 1억 5000만원, 운영비는 4000만원'으로 독립영화 전용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 한독협은 다른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이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 단지 '극장'이 아니라, 이후, 산업으로만 경도된 지금의 환경에서 '독립영화와 대안문화의 소통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 '국내 독립영화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사전조사가 전무할 뿐 아니라, 해외의 공공적 문화공간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와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 독립영화 전용관의 설립과 확산 문제는 '대안적 실천과 상상력을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 이어야한다.

6) 대안적(비시장적) 유통구조의 형성을 위한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힘겨움

한독협이 지향하며 실험하고 있는 '공동체 상영/ 비극장상영 구조의 확장', '독립영화상영 네트워크 건설'과 같은 활동은(이 역시 자본제 질서하에서는 '어리석은 일'로 치부된다). 독립영화를 '독점자본주의'하에서 '표정없는 상품-화폐교환'이 아니라, 만든 이와 보는 이의 콘텐츠를 매개로 한 직접적인 교감/쌍방향적 소통을 지향한다. 즉 '돈-상품-돈'의 순환구조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하의 생산/소비활동이 아니라, 비시장적 구조를 갖는 '상호교감과 토론의 자율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은 크게 눈에 띄게 진척되지는 않는다. (15년 전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관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작대기를 들고, 상영장 입구에서 영화상영을 지켜내곤 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화’의 ‘비시장적 소통’은 기존의 미디어권력과 자본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독립영화인들이, 영화를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강화에 기여하는, 문화적 소통물’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구조를 형성해 내겠다.’는 야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독립영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해보자. 이런 질문에 답을 내야한다.

‘고도화된 신자유주의 질서의 일부로 편입되어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막강해지는 현실서에 거리를 두고, 자신의 영역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힘겹지만 ‘대안적 소통구조를 찾아내고, 마련해내고, 이를 강화하기위해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체를 감춘 채, 어느새 민중들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하게 된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야심/ 상상력/ 실천’없이 지금까지 독립영화(진영)이 지녀왔던 진보적, 공동체적 함의들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4) 공동체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의 미비

여기에선, 독립영화 활동가들과 제작자들이 경제적으로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문제는 접어두자.

콘텐츠의 측면에서 보자면, 독립영화들은 주류미디어가 기피하는 작은 공동체들과 주제들에 대한 깊은 접근을 통해 (양은 많지는 않지만) 대안적인 문제의식을 생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제작자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온갖 도전을 감수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과 ‘소통구조’, ‘평가/비평문화의 형성’의 면에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과정’의 측면에선, 점점 더 ‘개인적 창작활동’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적 / 공동체적 실천’의 분위기는 약화되어간다. 개별창작자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쉽게 교류, 전파되지 않고, 타 제작자들은 그로부터 영감과 유대감을 얻지 않는다. ‘소통구조’ 마련에는 개별적 노력만 존재할 뿐, 힘을 모은 야심찬 설계는 더디다. 필자의 생각엔 진영 내에서 조차, ‘인상비평’ 이상의 상호작용적인 비평문화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즉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개별제작자의 창작활동’에 너무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이 독립영화진영 바깥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힘을 모아 연대하는 공동의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5) 주류미디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침묵 혹은 편승 욕망

- IMF 이후로,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일해 온 기층민중들의 삶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의 단위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 지난 수 년동안,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비정규직화 되었다. 지금 850만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기업의 계산에 따라,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생산요소일뿐이다.
- 지난 수 천년간 유지되었던 농업은 사라질 위협에 있다. 수백 만 농부들이, 못 생명을 기르고 순환시켰던 한국의 땅에서 햇살과 바람과 씨름하며 작물을 재배하는 일, 이 매우 오래된 일은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히 어리석은 일로 되어버렸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 민중들이 영문도 모르게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초국적 기업중심의 세계화’는, 그 파괴력에서 (다소 수사적이긴 하지만) ‘IMF의 10배 이상의 쓰나미’ 라는 ‘한미자유(누구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그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FTA가 약소국들의 공공영역을 파괴할 것이며 민중들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가 파괴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 그러나 주류미디어를 통해서는 그 연관과 구조는 거의 해명되지 않는다. 자신이 왜 항상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실직할까봐 전전긍긍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농민들에게, 자본의 유연적 지배전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미FTA의 진행사항은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금년이 지나기 전에 거의 모든 사안이 결정이 될텐데, 지금까지도 감추어져있고, 주류미디어는 낙관적 전망을 유포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 한미 정부간의 기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유무역체제를 추동하는 초국적 기업들의 위력을 감안할 때, 시청각서비스분야, 특히 통신과 융합되어가는 방송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은 틀림없이 벌어지고, 이는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지금의 공영방송체제를 크게 무력화시킬 것이 예측되지만 정작 방송계 내부에서 그와 같은 일을 막아내려는 대비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독점적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거대 상업미디어기업의 일원이 되어 지금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관심이 가있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6) 민중운동세력과 시민운동(개혁운동세력)들이 ‘한미 FTA저지 국본 결성’

- 각 분야의 공동 대책위 결성 (500여개 시민 사회단체의 참가)
 - 어떤 우려와 이를 돌파하는 상상력의 필요
-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있으며, 지향하는 가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대의 약화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독립영화진영의 시야의 교정 혹은 확장의 필요

(1) 독립영화의 ‘의미’ 재점검 필요

이제 누구나 ‘다양성’과 ‘독립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류질서(유연화된 얼굴을 한 독점자본주의)는 이제 ‘독립영화’를 ‘뒤통지 살 수 있다’라는 판매전략을 가지고 ‘값싸고 특

이한 상품' 으로 그들이 마련한 거대 시장의 한귀통이에 진열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은, 90년대 중반에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는 너무 다르게 되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 저항성 : 정치권력의 통제, 자본의 지배력, 주류 미디어의 획일적 가치관 유포 등에 대한 저항
- 대안성 : 주류사회가 당연한 것이라며 유포하고 강요하던 삶의 방식, 획일적 가치관, 을 넘어서는 '다른 가치' '다른 해석' '다른 상상력'을 추구하는 것.

(2) '스크린 쿼터 분쟁'을 넘어서는 사고의 필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범영화계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저지를 위한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립영화진영이 적극 결합할 수 없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영화산업이나 관계기구들이 영상문화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독립영화와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이해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항의는 정당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영화계가 산업확장에 만 힘을 기울이고, 농촌의 해체와 농민 삶의 붕괴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양산에 대해서, 문화의 상품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 문제는 FTA로 표현되는 초국적 기업에 의한 지배구조가 한국사회전체 경제기반을 무너뜨릴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삶의 가치들,(사람들 간의 관계, 공동체들간의 유대, 문화적 감수성, 더 나은 사회로의 희망, 수만년 동안 내려온 생명의 순환고리) 등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다.
- 독립영화운동을 '돈벌이로서의 영화제작/유통' 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소통'행위로서 사고하는 우리로서는 '공공영역이 위축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율이 약화되고 그 대신에, '몇몇 대기업이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를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FTA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명칭 미확정) 구성 아이디어들

(1) 실천단의 활동 목표

- '한미FTA 저지'를 위한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에 에너지와 영감을 주고 받는다.
- 민중투쟁에의 결합. 혹은 해당 미디어 활동에의 지원
- 독립미디어센터 구상 (투쟁체와 같이하되, 종속되지는 않는다.)
- 독립제작운동/미디어운동/문화운동간의 연대강화를 통한 독립미디어 가능성 구축

(2) 활동 영역

- 주요정보입수와 관리 (협상현황/ 민중투쟁 동향/ 주요쟁점 등)
- 네트워킹 (사회운동단체 / 민중의 삶의 현장/ 제작자 / 영화제작자원)
- 콘텐츠 제작 (개별제작 / 협동제작)
- 제작자원 관리
(스텝, 배우, 촬영/녹음보조장비, 장소, 운송수단 등의 확보 혹은 네트워킹)

- 소통구조 마련

(3) 활동기간

1) 1차 : 현재 - 2006 년 말

- 정부의 공언과 정황을 볼때, 금년 안에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
- 중요한 결정이 월드컵이 열리는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시급히 저항이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고, 미디어 실천이 이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다소 가벼운 접근이 필요함.
- 초기엔 대중들에게 주의환기를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며 구조를 압시, 해명하는 콘텐츠가 필요함.

2) 2차 : 2007년 이후 : 이후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구성

(4) 옹호하는 가치

- 각 단위의 자율적 실천과 경험의 교류
- 제작, 소통에서의 공동체적 방식
- 미디어실천의 주체 확장을 위한 오픈 네트워크
- 주류미디어내의 진보적 주체들과의 협력
- 민중투쟁에 시청각 미디어로 영감을 제공하기
- 정보공유라이선스 (연구 필요)
- 영상 소스의 합리적 공유

(5) 제작 (production)

- 제작은 개인 제작자. 혹은 제작자들 간의 협력제작 등 다양한 실천
- 지나친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장치 마련.
- 제작물들의 노출시기가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자율적 긴급협력시스템 마련

(6) 콘텐츠

- 각 민중투쟁의 수위에 조응하는 단계별 구성
- 10초짜리부터, 2시간자리까지
- 매 콘텐츠의 정확한 타겟팅 (누구에게 / 어떤 메시지를...)

(7) 소통

- 민중투쟁 현장에서의 직접소통
- 정보공유 라이선스 등을 통한 자율적인 인터넷 유포 유도.
- 각종 (비영리 영화제/ 문화행사/ 문화행동)에서의 적극 활용
- 퍼블릭액세스 구조에 대한 '집중 액세스 기간' 설정, 실천
- 주류 방송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액세스 시도.

- * 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 분들의 창의를 모아냅니다.
- * 모일 수 있는 공간 (6-7평 정도)는 마련이 가능합니다.

4. 하나의 사족

* 아래의 글은 매일 투쟁의 현장에 나가 있는 미디어참세상의 안창영활동가가 체계 들려준 말입니다. 이를 덧붙인 이유는 우리의 느낌과 판단을 콘텐츠화하고 소통시키는 ‘독립영화 실천’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제목 : [괴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메세지 :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때, 작은 공동체는 자신도 모르게 붕괴한다.

줄거리 :

극지방, 평평한 빙판 위에 수백마리의 바다사자들이 평화롭게 서로 몸을 맞대고 일광욕을 합니다. 작은 보트에서 두사람이 빨래방방이를 갖고 내립니다. 그들에 대해 바다 사자들은 무감합니다.

두 사람은 바다사자의 바로 앞에 다가가, 한마리씩 정수리를 내려칩니다. 바다사자는 세번 째 맞으면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바로 옆의 바다사자는 사람이 다가가서 동료들을 죽일때, 다시 자리를 잡기위해 약간 몸을 뒤척여서 다시 편한 자세를 잡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냥꾼들은 편하게 죽여나갑니다. 수백마리의 바다사자들은 자기 근처에 사냥꾼이 나타날때, 시선만 줄 뿐 그 살육의 현장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통을 못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기계적으로 한마리 한마리 죽인 다음 그 자리에서 가죽을 천연덕스럽게 벗깁니다. 바로 옆에 많은 바다사자들이 있는 그자리에서 말입니다.

해가 누엣누엣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사람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 죽고 두마리가 남았습니다. 한사람이 즐거운 표정으로 한마리의 정수리를칩니다. 나머지 한마리는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천진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모 방송사의 동물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방송된 것입니다.)

편집

- 위의 서사의 전개에, 한국 각지에서 벌어진, (미디어의 외면속에서 고립된 채 벌어진) 농민/노동자 들의 저항과 그들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경찰의 몽둥이와 깨님 머리)장면 등, 극적인 장면들의 교차편집 (스텝프린팅이나, 반복, 느린화면, 등 이미지의 연관성을 강조한 맥락화)

- 문자 텍스트들 (조용히 찾아오는..., 고립된 공동체..., 화려한 태양...,) 들의 적절한 활용
- 영상이미지와 소리, 문자텍스트의 적절한 배합을 통한 간명하고 압축적인 서사
-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포맷(스타일)의 활용여부 검토

(예상되는 카피)

' 이웃의 아픔에 분노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죽습니다. '

' 침묵이 습관이 될 때...,

* 함의

- IMF 의 개입과 신자유주의적 조정과정에서, 이미 한반도 공동체에서 지난 30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농업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FTA가 그 치명타가 되겠죠.
- 1백만의 현재의 농민들은 (아마도 땅과 호흡하는 마지막 농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사라지겠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 개입 이후 (이제 8년차군요.) 8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들은 계속 절규하며 저항해 왔으나, 미디어들의 외면 속에서 저항들은 고립되어갑니다.

- 왜 불과 10년 사이에 농촌 공동체가 붕괴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생명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부품으로만 전락하고 있는가? 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고,
- 이웃(사회)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무관심과, 연대의 파괴가 매우 위험함을 경고한다.

참고자료

한미FTA, 그 허와 실_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미 FTA,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_권경애(변호사)

스크린쿼터와 한미FTA_한국영화감독조합(D.G.K) 스크린쿼터 특별위원회

스크린쿼터제의 한계를 보완할 영화 상영 시장 정책에 대한 제언_원승환

더 읽어야 하는 자료 링크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의 문제점_<http://www.nofta.com/news/index.php?pl=5>

한미 FTA의 농민부문 피해_<http://www.nofta.com/news/index.php?pl=6>

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_<http://www.nofta.com/news/index.php?pl=15>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_<http://www.nofta.com/news/index.php?pl=16>

한미 FTA 대참극 야기할 것[금융]_<http://www.nofta.com/news/index.php?pl=17>

한미 자유무역 협상(FTA)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_<http://www.nofta.com/news/index.php?pl=18>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인터뷰]_<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52>

노대통령 조급증이 한미FTA 강행①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②

재경부-삼성에 포위된 현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보? 안 될 겁니다③

한미FTA되면 정동영 대통령 못된다④

국회에서 뭔가 해야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아무 생각 없어요⑤

한미FTA, 그 허와 실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한미 FTA협상이 선언되었다. 1년안에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 한다. 그래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고, 해서 선진경제로 이제 진입할 것이라 한다. 모든게 그리된다면 시비결 일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허나 모든 것을 따져 보아도 그리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반반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짚어 보자.

1. 알려진 것처럼 스크린쿼터문제는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주의적으로 73일로 반동강났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 규모 FTA인 북미FTA 때도 캐나다의 문화산업은 예외였고, 미국은 멕시코에게도 30% 즉 106일을 스크린쿼터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한국은 안된다 한다. 무조건 절반이라고 한다. 나아가 멕시코에게조차 요구한 적 없는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스크린쿼터 50일 축소시 적어도 1조원이상의 시장축소가 예상됨에도, 한국정부가 give and take로 받아들인 것이 협상개시 '선언'이었다.

2.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미FTA를 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진출의 전초로 삼고,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FTA를 통한 이른바 교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 즉 한국의 대일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배제된 한중일FTA의 잠재적 위험을 이로써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 미의회조사국(CRS)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게 약 300억달러의 실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3.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

정부 측은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GDP 0.7%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FTA체결 5-6년 뒤 한국이 대미 무역 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4. 투자와 관련해 볼 때 설사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FDI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

미국의 대미 투자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않다. IMF이후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FTA의 결과 혹 미국의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약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대미투자가 주로 장기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세계최대의 채무국 미국의 경제를 받쳐 주는 생산적 기능을 해 왔음에 비추어 이는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북미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은 3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위험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5. 서비스업중은 농업과 더불어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라 할 만하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개방과 민영화는 사회적 상층에게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의미할 수 있다. IMF이후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고, 현재 사회적 양극화문제가 현단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쟁점임에 비추어 이는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이미 50%를 넘어선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를 오히려 가속화시켜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6. 쌀을 제외했을 경우 약 2조, 쌀을 포함했을 경우 최대 8조 8000억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야말로 미국으로서는 협상의 최대 타겟임에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쌀분야의 10년 유예를 말하지만, 과연 쌀을 제외하고 미국이 협상에 응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한 해 농업분야의 GDP가 대략 20조라고 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10% ~ -40% 정도 생산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약 8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측의 기대대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증가는 만5천개에 불과할 것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7. 한미FTA는 순수 경제협정이라기보다, 군사안보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가 중미(中美)간의 쟁패기라고 본다면, 한미FTA로 인해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적으로 이미 '동북4성화'하고 있는 북한을 놓고 볼 때 이 경향은 북한의 대중(中) 편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길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안착시키고 나아가 통일로 가는 방도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8.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FTA는 130여건에 달하고, 이중 미국과의 FTA는 약 10%에 달한다

물론 그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은 각국의 조건 및 협상력에 따라 나라 마다 매우 상이하다. 그렇지만 칸쿤 WTO각료회의 이후 FTA로 통상전략의 선회를 이룬 미국이 최근 체결한 일련의 FTA는 대부분 고강도 FTA라 부를 만하다. 특히 미국은 1994년 북미FTA 이래 가장 큰 규모라 할 한미FTA에 최대의 양보 곧 '미국식 스탠다드'를 강제하기 위해 이미 5-6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년전만 하더라도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한미FTA가 정권후반기에 접어들어 최우선 대상으로 갑자기 둔갑한다. 그리고 내년 6월말 무역촉진권한(TPA)법안의 만기일이라는 미국의 국내 시간표에 맞추어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설득과 동의조차도 거치

지 않은 채 쫓기듯이 협상을 개시하고 있다. 과연 초보적인 협상전략과 목표조차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 정부의 한미 FTA추진 과정을 보면서 과연 현정부가 최소한의 국익이라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을지 묻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분명한 점은 FTA의 실(失)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반면, 이른바 득(得)은 여전히 몽롱하다는 사실이다.

한미 FTA,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권경애 (변호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센터 팀장)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줄속으로 진행되는 협상

정부는 2006. 2.3. 한미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쇄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 둘을 협상 개시의 진상물로 바쳤다. 한미FTA는 2004년 만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으나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미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5월에야 본협상이 시작된다. 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 6.에 만료되므로 내년 3월에는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미국은 GDP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1배 규모의 거대경제대국이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협상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줄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문제는 FTAR로드맵이다

정부는 FTA는 세계적 추세인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시장을 잃게 되고 국가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무역협정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자유무역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자간 통상질서인 WTO가 1995년 출범한 후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자 부시정권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미국 외의 나라, 특히 미국에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등은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룹별 대응을 하여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완하시킬 수 있었던 그 나라의 이득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의 지역무역자유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WTO의 틀 속에 평등한 무역질서를 형성하자는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현실대응 전략 없이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FTAR로드맵이다. 어쩔 수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킨 후에야 강대국과의 무역경기장에 출장시켜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선진국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을 분석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일 것이므로

FTA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 11.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술지수가 94. 9인 미국과의 FTA는 4.73%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있고 산업생산효과는 오히려 -27. 37%라고 보고한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지수는 51. 7로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각각 22. 99%, 27. 78%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중-일 FTA,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등 동남아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 후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정부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가 강해지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중주국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무마하고 협상을 무사히 완료하여야 한다는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마치 우리가 먼저 협상개시를 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득은 없거나 불확실하고, 실은 확실한 거래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한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몹살을 앓을 것이다.

대미무역수지는 악화되더라도 전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정부도 한미FTA협상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세계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저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

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된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 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NAFTA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출산업과 농업의 고용희비현상이 보일 뿐이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 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도 거짓이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한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FTA, 한인도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는가.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주적이고 평등한 외교통상 관행의 수립을 위하여

현재 통상정책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한 사람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WTO 법률국 법률자문관을 거친 그의 통상정책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에게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 일치한다. 외교협상에서 조금 덜 주고 더 얻어오려는 노력이야 당연지사인데 김현종 본부장 휘하 교섭주역들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은 그런 차원이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배치될 수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 더 긴밀한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겁이 나서 할 수 없는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다.

실정이 이러한 바에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보고를 받아야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이해당사자들이 협상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지난 7년간의 한미투자협정이 스크린쿼터를 지키고자 하는 영화인들의 고단한 싸움으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은 한미FTA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였지만,) 문화산업인들의 줄기찬 노력이 미국의 의도를 무산시켰다. 우리 영화인들의 이런 역량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나라 문화인들은 세계문화다양성협약의 산파역할을 하였다.

스크린쿼터 축소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에 사전 협의도 통보도 없었던 저 오만방자한 통상관료들의 밀실외교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통상과정 상의 절차적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평등한 세계무역질서를 창조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자료. 06-01.

스크린쿼터와 한미FTA

"올바른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스크린쿼터 특별위원회

서론

이 자료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조합원 여러분의 현재 상황 인식에 도움을 드리고자 편저술한 것입니다. 작업의 주체는 D.G.K 산하 스크린쿼터특별위원회이며, 작성책임은 위원장인 김경형 감독입니다.

이 자료는 기왕의 공개된 기사나 아티클 등을 참조하였으며

특히, <서프라이즈>에 [렘브란]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리는 필자의 글들이 주요한 텍스트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렘브란] 님의 동의는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금)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한미FTA와 한국사회>라는 세미나의 자료역시 주요하게 참고 되었습니다.

글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근 한 세기 동안의 무역전쟁의 흐름 속에 스크린쿼터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크린쿼터 문제가 왜 한미FTA 문제와 본질적인 연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지 알아봅니다.
2. 한국에서 스크린쿼터 싸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왜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보려 합니다.
3. 한미FTA의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개인적 삶의 지평까지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고민해 봅니다.

작성자의 일부 주관적 판단과 견해가 불가피하게 개입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였으며, 이후 여러분의 판단과 비판,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 더욱 풍부한 자료가 되어갈 거라 믿습니다.

구성

제 1 편 스크린쿼터 - 미국의 백년전쟁

제 2 편 한국의 스크린쿼터 전쟁 - 불가사의한 저항

제 3 편 한미FTA - 미완의 드라마

Epilogue

제 1 편

스크린쿼터-미국의 백년전쟁

#. Prologue / Blum-Byrnes 협정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본토가 유린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전승국 미국은 유럽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 목표는 당근. 미국의 이익.

tip-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이해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직접경영에 의존하던 식민지독점자본국들간의 전쟁. 식민지경쟁에서 뒤처진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과 아시아 유일의 식민지독점자본국이던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을 한축으로 영국,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과 벌인 전쟁. 이후 세계는 진영을 재정비한 자본주의국 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중국, 북한, 등을 축으로 한 공산국가간 냉전으로 돌입. 자본주의 진영 입장에서 식민지 직접경영이 아닌 정치, 군사, 경제적 동맹을 통한 시장 개입 및 확대, 또 그를 통한 다국적독점자본의 이익 극대화 추구, 라는 신식민지 독점 자본의 시대로 전이, 라고 이해될 수 있음.

미국의 영화산업은 에디슨의 영사기 발명, 유성영화의 개발등 으로 무장하고 유럽시장을 공략.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 스크린쿼터 채택.

미국 정부는 이때부터 스크린쿼터 폐지 전쟁에 나서기 시작. 1946년 프랑스와 맺었던 이 <블룸-번즈 협정>에서 미국은 전쟁채무를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미국영화 수입을 적극 늘려달라는 요구 관철.

#. Sequence 1 / GATT

1947년 미국은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목하고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 번역되는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유럽 각국은 영화를 교역의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관철시켜버리져..

tip- 제 4 조

GATT 제 4 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계약 당사자가 노출영화 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스크린쿼터의 형식을 취한다.” 재미있는 것은 현행 WTO 제 4 조에도 이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텔레비전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미국은 영화의 강력한 경쟁력과 더불어 텔레비전 시장에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세계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통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구여..

이에 캐나다와 유럽 제국들은 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합니다. 싸움이져.

그러자 미국은 1961년 캐나다 포함 20개국을 GATT에 제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4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GATT 안에 특별기구 까지 만들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합니다.

미국 패배!!!

#. Sequence 2 / 저항세력의 성장

Scene 1. 도쿄라운드

70년대에 접어들자 20여개국들이 GATT 제 4 조를 기반으로 영화와 TV 산업

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보조금등)을 마련해 버립니다.

꼭지가 돈 미국은 이 문제를 1973년의 도쿄라운드로 가져가지만, 여기서도 결국 문화상품을 교역대상으로 하자는 미국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tip-도쿄라운드

미국이 1971년 달러방위조치, 10% 수입부가세 부과조치. GATT 체제에 대한 위협. 이를 논의하기 위해 1973년 도쿄에서 열린 최종회의. 여기서 선진 공업국간의 완전한 관세폐지를 요구하는 소위 '닉슨라운드' 채택.

Scene 2. UR

도쿄라운드에 따른 관세 인하가 87년 종료 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림. UR. 즉 **우루과이 라운드**. 여기서는 종래의 물품에 더하여 금융, 정보, 통신 등 서비스 무역도 그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관세는 일률적으로 GATT 방식이 적용되구요.

Scene 3. WTO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섭이 녹록치 않아서 1993년에나 타결되는데요, 최종종결은 94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였구요, 이 협상결과 준수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드디어,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고..

1995년 1월 1일 WTO(세계무역기구)가 발족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시장개방의 집요한 역사가 WTO에서 1단계 정점을 맞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tip-신자유주의

아시겠져?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독점자본들의 자유’ 라는 겁니다. ‘세계화’라는 것 역시 독점자본들이 온 세계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겠다는 의미져.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식탁에 스펀지가 올라온 지가 언젠데, 계속 이러는 거 보면 자본의 이익을 향한 무한팽창의 욕구는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경이나 생태적 가치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겠져. 새만금에서 보듯.

Scene 4. 비수 / 국경없는 TV령

그러나! BUT! 유럽제국은 미국의 이러한 집요한 정치, 경제적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 연합체 결성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EU의 전신인 EC 였지요. 근데 이념의 EC가 1989년 협의문에 <국경없는 TV령>을 전격적으로 채택해버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EC 협약국은 TV 및 라디오 방송사의 방송 시간 중 과반을 유럽작품에 할당해야 한다”

쿠궁!!! 또 하나의 콘텐츠쿼터제 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등에 비수를 꽂은 거져. 미국, 당근 가만있지 않았겠져?

#. Sequence 3 / 드더 발발한 전투

미국은 86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로 이 <국경없는 TV령> 문제를 가져가지만, 이미 문화산업의 파급력과 파괴력을 알아버린 모든 나라들의 저항 앞에선 속수무책이였져.

그런 와중에!

1995년. 소위 OECD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시키기 위해 소위 MAI 라는 걸 비밀리에 진행시킵니다.

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자간 투자협정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MAI의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 투자는 절대적으로 보호 되어야 하며,
2. 국가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3. 규제철폐와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협정이행의 전제이며,
4. 노동쟁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도 '분쟁해결'의 대상이며,
5. 체결국이 5년간은 탈퇴할 수 없으며,
6. 탈퇴한다해도 15년간은 협정이행의 의무를 져야한다.

무시무시하져? 특히 저 두번째 항목..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1997년 미국과 캐나다의 NGO 들에 의해 전격적으로 폭로되구여, 또 OECD 회원국들간의 불화로 이 MAI는 무산되는데여,

그 불화, 무산, 의 매개가 되었던 게 바로 문화, 즉 영화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역시 문화부문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구여, 그러나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미국에 맞서 문화적 예외를 요구하는데여, 여기에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각국들이 동조하져. 그러다가 결국 1998년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가 MAI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여러나라가 동반탈퇴를 해버리면서 MAI는 공식중단 됩니다.

미국. 또 똥 밟았져. 2패!!

그러나 미국놈들이 어떤 녀인가여? 포기 안하져.

MAI가 실패하자 미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DDA입니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실패한 MAI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시킴.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이 도하개발의제의 중요한 내용은여, 드더, 우리생활의 필수 서비스, 즉 식량, 물,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등을 모두 상품화하고 개방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DDA를 통해 미국 등 초국적 자본들은 MAI를 WTO 체제 내에서 구현하려한다는 것이져.

여기까지가 소위 다자간 투자협정의 시대이구여..

미국은 여기까지 계속되는 실패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뭘까여? 그렇습니다. 바로 각개격파! 지요.

FTA = Free Trade Agreement 란 미국의 일방주의가 다자간 협상에서 잘 안먹히자 각개격파로 전술전환을 한 것입니다. 으.. 집요한 미국넘덜..

#. Sequence 4 / 각개격파

근데 이 각개격파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머 FTA도 각개격파지만여. 스크린쿼터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여? 이제부터 익숙한 얘깁니다.

1962년 이탈리아	스크린쿼터 철폐와 문화시장 개방
1975년 덴마크	“
브라질	스쿼 130일에서 20일로. 시장점유 5%로 격감
1985년 영국	스쿼 철폐, 문화시장 개방
1990년 대만	스쿼폐지. 년50편제작 35% 점유율, 20편제작 5%점유율.
1993년 스위스	스쿼철폐, 문화시장 개방
1993년 멕시코	NAFTA. 스크 30%에서 매년 5% 축소. 1990년 80편제작 30% 점유율이 98년 10편제작 5%점유율로 급감. 2000년 좌파의 집권으로 매년 10%씩 올리기로 법 개정. 그러나 법적 구속력 못가짐. NAFTA의 ‘이행의무금지조항’으

로 법집행불가능.

1994년 뉴질랜드 GATT 협정 하에서 방송포함 영화시장 전면 개방. 미국 95% 점유. 1998년 방송법개정. 당근 미국이 국제법에 제소.

자,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여? 근데 유럽 각국들도 딜레마에 빠 집니다. 왜냐? GATT 부터 WTO, DDA 등 각종 세계무역협상기구는 본질적으로 교역을 다루기 위해 만든 체집니다. 유럽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져. 근데 여기서 계속 미국에게 문화는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만 한다는 게 즐라 짜증 나기도 하고 또 결국 질수 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걸 깨닫져.

고림 우짜냐? **게임의 룰을 바꾸자!** 일케되는 거져!

#. Sequence 5 / 반격

먼저, 캐나다가 나섭니다.

1998년. 캐나다 정부는 오타와에 각국의 문화관련부처 장관들을 초빙해놓고 는 INCP 즉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네트워크>를 창설합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접근법을 일반상품에 대한 접근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시키자는 의도였 쩌. 그리고 WTO에 대응하는 국제문화기구설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에 돌 입합니다.

동시에 CCD 즉 <문화다양성을 위한 연대회의> 같은 국제문화 NGO들도 행동을 시작하구여..

그러다가, 2002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52개국 300여개의 NGO들이 모여 INCD 즉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를 창설하게 됩니다.

근데여, DDA 즉 도하개발의제에서 문화상품을 포괄하는 MAI 내용을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하게 되자 국제문화기구설립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구 만들고 앉았다가 미국이 선수치면 곤란하잖아여? 해서, 기왕에 있는 기구를 통해 국제협약을 만들자! 일케된 거구여,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바로 “유네스코” 였던 거져.

짜잔~ 미국, 또 한 번 조맬 위기에 처합니다.

자, 미국의 독점기도에 치를 떨던 반군들은 2002년 INCP로 하여금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발표하게 하구요, 2003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그해 10월 제 32 차 유네스코 총회에 <문화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미국넘덜 줄라 똥줄 타게 되는데요, ㅋ.. 거기엔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ㅋ.. 미국은 당시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녘어여~ 그러니 조맬거져. 1985년에 미국은 유네스코를 탈퇴했져. “시바. 유네스코 운영금의 반이상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투표권은 1표야? 조또. 나 안해.” 이러면서요. 그러니 어떡해여? 지들 없는 자리에서 다양성협약은 당근 통과될 것이고 그럼 한세기에 걸친 노력이 수포가 되는 거인데..

해서, 미국은 또 부랴부랴 유네스코에 재가입합니다. 로라부시라는 여자가(대통령마누라 ^^*) 재가입연설에서 이러져..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유해한 이데올로기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장으로써 유네스코가 해야할 일이 있고..어찌고..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에 도움이된다..저찌고...”

들으셨져? 미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저 담대하고 뻔뻔스런 발상.. 아.. 살떨려..

결국, 미국은 이 문화다양성협약을 저지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에 기어들어온 건데여.. 온갖 헛지랄을 다합니다.. 2005년 10월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표결이 눈앞에 다가오자 협약반대를 촉구하는 국무부장관 명의의 서신을 각국의 외교부처 장관에게 발송하기까지 하져.. 지랄..

(유일하게 한국정부의 관료만이 찬성표를 던져 놓고도 애매하게 미국입장을 거드는 발언을 자진해서 기자들한테 했다는 거 아시져? 도대체 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여? 시바..)

암튼! 결국 미국의 모든 노력들은 삽질에 불과했다는 것은.. ㅋ..

아시다시피.. 148 : 2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한 문화다양성협약은 마침내 저항군이 미국의 폭압에 맞설 수 있는 전투진지 구축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져.. 아싸!

그러나..

#. Sequence 6 / 시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미국)

문화 다양성 협약과 함께 이번엔 프랑스가 또 미국에 한방을 날립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EU 헌법초안에 “문화는 국제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1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명문화 해버립니다.

ㅋㅋ.. 미국은 이 한세기에 걸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걸까여?

아닙니다.. 아직.. 흑.. ㅠ.ㅠ

유네스코에서 통과된 협약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져. 따라서 2007년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전까지 30개국 이상의 비준을 마쳐야만 그 협약의 구속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빈틈을 노려 각개격파에 나설 것이 분명하구여.. 그 중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영화제국의 한세기에 걸친 공세에서 자국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각국의 몸부림은 대체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 맹목의 와중에도 한줄기 희망의 꽃이 피어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한국이였져. 95년을 지나면서 폭발

하기 시작한 한국영화의 바탕엔 스크린쿼터가 있었다, 는 게 세계인들의 중론입니다. 한국의 스쿼는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왜 95년이나 구여?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 전엔 사실 극장들이 스쿼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져. 제 2 편에서 알아보니다만 93년 UIP 직배 이후 15% 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은 스쿼감시단 활동이후 올라갑니다. 물론 그 이후 영화계의 급속한 세대교체와 김대중정부의 지원책들도 빛을 발하구여.

자! 그럼 제 2편으로 넘어갑니다~

제 2 편

한국의 스크린쿼터 전쟁. 불가사의한 저항.

#. Prologue / GATT

한국이 국내법에 스크린쿼터를 명시한 건 1966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7년 우리나라도 GATT에 가입하져.
당시 한국영화는 연간 200편 정도 제작될 정도로 최대 중흥기였습니다.

이 당시 스쿼는 90일이었는데여, GATT에 가입하면서도 스쿼를 지켜낸 배경에 대해선 잘 몰라여. 아마 그 4조의 조항, 또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 몰려있었던 점, 등이 배경 아니었을까여?

그러나..

#. Sequence 1 / 슈퍼 301조

12.12, 광주항쟁, 그리고..
1981년 전두환집권..
이 당시 유명했던 게 바로 슈퍼 301조 였져. 다들 아시져?

드더 1986년, 한국은 이 슈퍼 301조에 걸려 소위 ‘301조 일괄타결’이란 이름으로 대부분의 국내시장이 개방됩니다. 스쿼축소 반대나 FTA 반대를 놓고 쇄국 운운하는 넘덜.. 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넘들이에여.. 의도적이거나.. 암튼 광주학살로 들어선 전두환정권은 그 정통성의 약화라는 약점 때문에라도 시장개방을 안할 수가 없었져. 이 당시 한국영화는 약 3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여, 이 일괄타결 때 스쿼를 폐지시키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87년 6월의 항쟁, 대선, 88올림픽 등으로 이어지는 국내정세의 숨가쁜 전개과정 속에서 세월은 그냥 흘러가져..ㅋ..

그러자 당근 미국님덜 또 설레발을 칩니다.

미국영화수출협회(MPEAA)가 한국의 스퀴폐지가 안되고 있다면서 301조에 의한 조사와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통상대표부에 제출하져. 근데 미국정부는 “어른이 되었으면 독립해야지” 따위의 소리를 늘어놓는 대신 한국정부를 압박합니다. 참 노모와 비교되네..시바..

결국, 1988년 제2차 한미영화협상이 열리구여.. 외화수입심의용 영화 프린트통관 추천제도 폐지, 외화수입 프린트별수 제한 폐지, 공연윤리위원회의 외화 심의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 유명한 UIP 직배가 시작되었던 거져..

근데 이 때도 일단 스퀴는 살아남습니다. ??? 희한하져?

#. Sequence 2 / WTO

그렇게 세월은 흘러 영삼이가 대통령되고는, 1995년! 머져? WTO져.

근데여, WTO 협상에서 세계 각국은 문화예외조항에 근거해서(제4조!!!) 문화정책을 확대하며 방송과 영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갑니다. 근데 말에여, 한국정부는 144개 WTO 참가국 중 34개 나라만 했던, 영상서비스 분야를 협상리스트에 넣고 개방을 받아들여요. 이거 참.. 누가 그랬겠어여? 외교통상부였어여. 이년덜 대가리 속을 한 번 들여다 보고 시퍼.. 근데.. 참 희안하게도.. 제작과 배급시장은 개방했는데.. 상영부문인 스퀴는 또 살아남아여..

아~ 세 번의 기적 같은 생존이..

하지만 당시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겨우 15%로 하락해 있었습니다.

직배의 후유증이었져..

#. Sequence 3 / BIT

미국은 WTO 출범직전에 양자협상을 무기로 세계 각국의 문화시장 개방을 거의 완성시키고 있었져. (제1편에서 살펴봤어여)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1994년 김영삼정부에게 BIT 체결을 요구합니다.

tip-BIT

BIT. 이거 풀네임을 제가 못찾겠네염. 쫘 찾아주삼. <한미투자협정> 이라는 건데여.. 양자간 협정입니다. FTA가 사회의 전품목과 부문을 망라하는 거라면 이건 투자, 즉, 돈의 흐름에 관해 무한자유로 풀어주자, 는 겁니다. FTA 안에 당근 이거 포함되어 있져. 글구 제1편에서 알아본 MAI의 독소조항, 특히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이 살아있습니다.

tip-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

FTA에도 적용되는 독소조항입니다. 자국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법률 혹은 기타 정책적 배려를 통해 부과하는 모든 조치들을 불법화하는 거져. 스퀴가 여기 걸리구여, 방송쿼터도 걸리구여, 언론채널 머독이 MBC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조항때문이져. 5년이상 국내거주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만 방송국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 된다는 야그. 산업전반에 다 적용되져. 흐미.

근데여, 영삼이성이 강 생깁니다. 그런 거 며할라고 해?! 웃기져?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나? 흐.. 암튼 그래서 진도 못나가고 흐지부지 되는데여..

보다못한(?) 전국의 극장주들이 95년에 한 건 합니다. 바로 스크린쿼터 헌법 소원을 내져. 근데 헌법재판소가 헌법합치 결정을 내려버려서 극장주들 졸라 뺄쫓해지져. 헌법재판소 그 땐 꽤 괜찮았네...??..

tip-헌법재판소판결문

“.. 스쿼는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헌법 제 119 조가 밝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창의성 존중, 경제질서에 모순 되지 않는다.. ”

크크.. 한국의 스크린쿼터, 그 질긴 생명력.. ^^*

근데엄.. 우루루루루루루루~ 콰광!!!!!!!!!!!!

IMF가 터집니다....

#. Sequence 4 / IMF - 본격화된 스쿼 전쟁

1998년, IMF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가 절실했구여,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BIT 체결에 나섭니다.

때맞춰 98년 4월 윌리엄 베이커 MPEAA 회장이 내한해서는 설레발을 까져. 스크린쿼터 줄이면 5억달러 투자하겠다! 구여. 이걸로 극장 지어 줄 테니까 그 극장에는 스쿼 적용하지 말자구여. 지랄을 허져?

그리고 7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가 BIT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져. 그러자, 바로 답날..

그니까 7월 22일. 한덕수, 라는 녀이, 알져? 짐 재경부장관이고 부총립니다. 당시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어여. (짐은 김현종이라는 반미국인인 변호사출신 녀이 맡고 있져) 한덕수가 총대를 맵니다.

“외자유치와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스크린쿼터 폐지가 바람직하다.”

아시겠져? 이 웨이덜이 한국영화진흥 운운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다행히 문화관광부가 스퀘 축소 불가를 외쳐주구여,

영화인들은 이 때 <스크린쿼터사수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거져.

그해 11월에는 BIT 제3차 실무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스크린쿼터 일수를 92일로 축소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가 미국이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 결렬되었다는 게 뽀록나서 개쪽까구여..

해 바뀌어 99년엔 국회가 스퀘유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방한한 미국 상무장관 앞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스퀘지지를 표명하고..

tip- 소문하나

김대중대통령의 방미 당시 2002년 부터 스퀘를 60-80일로 축소한다는 안을 가지고 체결하려고 미리 협상을 진행했었다는..확인안됨..

어쨌거나 김대중대통령이 스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도 스퀘유지로 기울면서 외통부는 항복하져. 결국 “스크린쿼터는 한미투자협정체결과 별도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발표하게 됩니다.

ㅋㅋ. 스퀘전쟁의 1차 승리였져.

2001년에 부시정부 들어서고 김대중을 부시가 아니꼬와하면서 관계 안좋아지고, IMF 어느정도 진정되고.. 해서 결국 BIT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근데요, 근데 말입니다. 참 나. 2002년에 외통부가 또 삼질을 합니다. GATT,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을 거치면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그토록 싸워서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부문을 이 자식들만은 끝까지 교역상품으로 간주하여 2002년 6월 30일 문화부문에 대한 양허안을 WTO에

제출합니다. 우리나라 외통부 애덜.. 미국 스파이덜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녀담 아네여. 이 부분 나중에..

tip-양허안

WTO 체제하에서는 개방협상을 하는데, 어느 분야를 어느정도 개방하라는 양허안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고,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해 양허안을 내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부문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라고 간주하면 양허안을 내지 말아야 하거든요. 프랑스, 캐나다 등은 그래서 양허안을 내지 않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문화부문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던 거져.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국영화는 이 시기에 제2의 중흥기에** 접어들습니다. 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멀티플렉스가 급증하고, 늘어난 스크린 때문에 스크린쿼터 유인이 생기고, 그래서 극장이 투자와 제작에 참여하고, 마침 <쉬리> 대 폭발로 한국영화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아자!

#. Sequence 5 / 다시 또 BIT

드더 놔현정됩니다. 아- 갑자기 이성이 흐려지고 감성이 폭발할려는 찰나네요. 빠질..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흠.. 써볼께염..

시벌님의 외통부 시키들이 또 바람을 잡습니다. BIT 체결효과.

BIT가 체결되면 40억달러의 투자유치효과가 생긴다~

북핵문제 해결 위해 BIT가 필요하다~

근데 스쿼사수 주장하는 영화인덜 땀에 일이 안된다~

고로 스쿼사수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져? 예? 아녀여. 올초에 한 얘기가 아니라 2004년에 한 얘

기여요. 똑 같져? 시팍새끼덜.. 여론을 조작해가는 과정도 지금과 흡사해염.

근데, 일단 이창동 문화부장관이 버팁니다. 구래서,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스쿼문제 논의가 실패하고, 5월에 노현이 미국에 갑니다. 노현이 취임할 때 미국에 할말은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때 스쿼 축소/폐지를 약속하고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바.

근데 이창동장관이 사고를 하나칩니다. 바로 DDA 협상에서 시청각분야의 양허안 제출을 거부하져. 양허안은 위에서 알아봤습니당. 미국이 개거품 무는 건 당근빠따토끼밥이져. 미국넘덜 앞잡이 재경부와 외통부에 심하게 압박 들어가구여, 또 전경련에 압박 들어가구여, 보수언론 동원됩니다. 내용, 지금하고 흡사합니다.

스쿼가 성역이나. 스쿼 없애면 40억불. 한국영화과보호. 누굴 위한 스쿼냐.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

마침내 노현은 재계대표들과의 오찬자리에서 협정에 걸림돌이 되는 스쿼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지요. 이창동장관 결국 '연동제'라는 알쏭달쏭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논의 진전은 안되구여..

헌데, 스쿼가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노동계, 환경계, 등에서 BIT가 가진 모순과 악영향 등을 하나씩 밝혀 내면서 BIT 체결 반대론이 비등하게 되구여..

결국. 제3차 BIT는 물건너 가고 스쿼는 살아남습니다.

스쿼전쟁 2차 승리!!!!

미국, 망연자실이져. 씨바 이게 떠야??!! 존나 이해안되져. 세계를 거의 다 먹었는데 니미..

재경부, 외통부 관료들 다 친미로 포진해 있고, 북한문제 무역문제 다 엮어서 자발적으로 BIT 맺어달라고 하게 맹글었고, 시바, 싸인만 하든 되는데.. 이걸 못 먹어????!!!

tip-재경부마피아

세간에 떠도는 설 하나. 근데 대개 이런 설.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역사의 교훈, 이라는 거 잊지마시고.. 재경부마피아란 미국유학생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인적네트워크, 썸으로 이해됩니다. 이 썸클은 미대사관, 전경련, 암참, 등에 의해 관리되든, 유대를 맺든, 관계가 있다고 하구여, 이 썸클에 들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배블록, 특히 재경부나 외통부의 관료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학계에서도 출세하기 어렵구요.. 유럽지역에서 공부하고 온 특히 경제학 쪽은 대한민국에서 밥벌이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장하준교수가 캠브리지에서 교수생활하고 있는 게 우연은 아닌듯 합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는 김현중은 아예 고등학교 부터 미국에서 나온 변호사 출신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전문가가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라는 걸 어케 이해해야되는 지도 모르겠지만, 이 녀름 자기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와달라는 초빙을 받았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져. 시바. 미국은 이들을 통해 친미가 아니라 아예 숭미적인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여론을 확대재생산하져 당근. 게다가 그게 아니더라도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은 한미동맹강화에 사활을 건 집단들이고, 재벌들이나 기타 보수우익집단들 역시 자발적으로 숭미적가치관들을 재생산해내고 있으니, 한국은 이미 미국에게 있어서는 지네들 앞마당 만 큼이나 자유로운 곳일 겁니다. 노현정부가 들어서서 잠깐 오잉? 했겠지만 말뿐이었져. 더구나 지금 노현은 레임덕입니다. 한미FTA에 올인한다면서 양극화해소에 나서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인식을 보면 저게 치매 아닌가? 싶을 정도고..

게다가 그동안 한국영화시장은 아연 활기를 띠고 있었겨.. 시장 점유율이 이전 60%를 바라보고.. 한류는 중국으로 동남아로 기세 좋게 뻗어가고..

자, 이 일을 어떡한다..?

역시, 미국은 이 사태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 Sequence 6 / 학살

제 1 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얻은 교훈은 역시 **각개격파**입니다.

2005년. BIT를 FTA로 가져가기로 한 미국과 한국정부는 공격에 나섭니다.

2006년 1월 26일. 한덕수. 한미FTA를 해야하는데 미국사람들이 스쿼 댐에 못 하겠다고 한다면서 스쿼 없애야 한다고 바람잡져. 글구 권태신이 시켜서 ‘영화계에 집단 이기주의 있다’고 풍선을 날립니다. 영화인들 당근 반발하구여. 여기까진 2004년의 정확한 재판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협상 전 확인사살>** 입니다!

스쿼를 본협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사전에 죽이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거였겨. 스쿼 댐에 협상 자체가 발목 잡혔던 기억에서 보면 자연스런 수순이겨. 이걸 죽이고 와라. 그럼 **FTA 알현권**을 주마. 약가책정 기준문제, 배출가스규제문제, 소고기수입문제, 역시 그 알현권 때문이었겨. FTA를 우리 정부가 설득시킨 거라구여? 개도 웃을 말입니다. 지들은 그만큼 당당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 시키덜은 전부 무뇌아들입니다. 아니라면, 지들이 미국인인양 환상 속에 사로잡힌 승미주의자덜의 갖다바치기겠겨.

그 다음 과정은? 다 아시는 과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바로, **<여론>**입니다.

2004년과는 다르게, 이 여론의 싸움에서 우린 분명히 밀렸습니다.

정부와 한미동맹강화 세력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여론이 조작된 거 분명히 있지만, 우리 영화인들이 그런 약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달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나름 정교한 대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또한 인정하고 반성해야겠져..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서라도 말이져..

Anyway..

2006년 3월 7일. 드더.. 스쿼는 학살당합니다.

II.II

몇 번의 기적같은 생환과 두 번의 대승리 이후..
단 한 번의 참담한 패배..

끝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희망을 가져보자, 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한미FTA** 때문입니다. 스크린쿼터 싸움이 단지 스쿼 하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린 벌써 해산했어야 했겠지요. 2004년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리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쿼싸움이 한미FTA 싸움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범국민적인 연대를 기다리며 굳건하게 전선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다는 점, 입니다. 광화문의 천막이지요. 이 의미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영화인들이 전면적인 사회적투쟁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 한국영화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쌀과 영화> 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론 서툰기도 했고, 방법적으로도 미약했으나, 그 연대의 의미자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영화인들의 사회적의식에 일대 변화와 성장이 오고, 그리고 행동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앞으로의 과제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징후를 볼 때,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근거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도는 또 다르게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 다시 국민일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린, 이깁니다. 그리고, 그 만큼 우리 한국영화의 몸과 마음은 성숙해져 있겠지요. 한미FTA. 이제 그걸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 3 편

한미FTA - 미완의 드라마

#. Prologue / FTA

FTA = Free Trade Agreement

FTA는 GATT의 일종의 예외규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개도국들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 주도의 GATT 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 하겠다는 의도로 GATT 조약문 24조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다자간 협정인 GATT 내에 양자간 협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WTO 체제 안에서도 살아 있게 됩니다. 양자간 협정은 협정 밖의 타국에 대해선 배타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체제에 대항해서 양자간 협정을 통해 말하자면 미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최근까지도 FTA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는군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 결렬 후 미국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이 양자협정을 통해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FTA는 사회의 전분야를 예외없이 모두 상품화하고 개방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걸 자유 '무역' 협정이라기 보단,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이해영교수)

#. Sequence 1 / 왜 한미FTA 인가

Scene 1. 국제정치경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급성장, 유럽연합의 확장, 중남미 지역에서의 좌파 정권의 확산, 이라크전쟁의 실패, 8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쌍둥이적자,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쟁의 비도덕성으로 인해 미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은 심대한 도전에 봉착해 있습니다. 팍스아메리카나가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시 정부의 대아시아전략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실질적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건 미국으로선 악몽일 것입니다. 미일동맹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중국견제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겠져. 그러나 교활한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는 건 사실 어렵구요. 미국은 약간 실망 섞인 목소리를 간간히 비치기도 하지요. 노현이 동북아균형자론 운운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지형 때문이구요.

미국이 한국에서 향유해온 국제정치적 기득권은 대중견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엔 매우 적절한 것이져. 근데,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환경, 그리고 한국내의 반미정서나 노현정부의 성향등은 미국에겐 새로운 도전이었을테구요.

이런 상황을 딛고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는 한국을 대중견제의 전초기지로 삼고, 경제적으로는 대중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선 매우 소망스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FTA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져.

물론 미국정부가 가장 큰 규모의 FTA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은 것 처럼 경제적 실익도 있져. 미국 애덜 자료를 보면 한미FTA는 미국에게 30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Scene 2. 국내적 상황

그동안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1990년대 이후의 상황변화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절대적 친미’로 부터 ‘상대적 친미’로 진화하고 있었구요, 이는 한국사회의 지배엘리트 집단 내의 전통적 친미파, 즉 ‘한미동맹파’의 지위변경을 요구하고 있었져.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재편 혹은 적응을 강제하는 조건이 됩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등장이 그것이지. 이런 정세변화는 한미동맹과의 계토화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으로 내달린 거구여, 그래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동맹파들은 사활적인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지. 그들은 노무현을 상대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진다니, 좌파정권이라다니, 북한에 퍼준다니, 투자가 안 들어온다니, 경제가 위태롭다니, 기실 한국사회의 위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 집단의 위기를 한국사회의 위기인양 과대포장하고 선전해왔던 것이지. 웬까여?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는 위축된 동맹파들의 지위를 복원하는 유리한 환경이 되고,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함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 되는 거져.

근데, 근데 말이지, 왜 노무현은 한미FTA에 올인하려는 걸까여?

Scene 3. 군사

한미FTA는 경제협정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한미동맹강화라는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동맹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는데여.. 미국의 의도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기지로 삼으려는데 있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잖아여?

해서, 한미FTA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인데여..

이것은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기동타격대’로 변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세기형 불박이 주둔군의 형태에서 21세기형 기동군체제로 군사전략을 재편하는 중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 시작된 소위 군사적 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건데요. 그 핵심 개념은 첨단화better, 경량화lighter, 신속화faster, 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부시의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만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 경우 주한미군은 즉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한미연합전력구조하에 있는 한국군 역시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린다는 거져.

근데 말이져,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이미 2003년 10월 미대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4차 회의에서 이 전략적유연성에 대해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노무현은 2005년 공사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져.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 합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암튼 한미FTA는 경제적통합과 함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더불어 군사적 동맹을 미국의 전략에 따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미 이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 Sequence 2 / 노무현

사안이 이토록 중대한데도 노무현은 왜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북핵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화조치 일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창비>를 중심으로한 일군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미FTA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 정부 최대의 외교 화두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이져. 나름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미FTA를 통해 남한을 죽이고 반대급부로 북한을 살리게 된다면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를 궤멸시키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배성인교수)

노무현의 논리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국자본과 제휴를 맺어 그들의 기술력, 서비스 경영능력을 흡수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통째로 구조조정해 경쟁력 있는 농민, 영화배우, 교사, 의사,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FTA는 딜입니다. 미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을 제집처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준다고요? 재정부관료들이 노무현을 어떻게 설득했는진 몰라도, 낭만적이고 순진하기까지 한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을 전략기지로 삼으려한다면 한국사회의 붕괴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처럼 유지되겠지요. 그러나, 경제통합과 군사적 동맹의 강화는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이며, 중국의 소외와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4대 재벌들은 모멘텀을 제공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대중들과 우리의 생태적 환경은 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2. 노무현은 또한 자신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한미FTA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FTA 망의 구축이 동북아안보공동체의 실현에 직접 기여하진 못할지라도 FTA 체결국간의 경제공동체의식은 안보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왜 미국과의 FTA가 먼저인가? 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합니다. 2004년말 전경련 보고서에서도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볼 수 있는 FTA 체결국 순위는 중국, EU, 미국, 일본의 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FTA 우선 순위 국가가 그 순서라는 것이져. 게다가 한미FTA로 인해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현재의 강력한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역내외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걸을 것입니다. 북핵문제에서도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워지겠져. 동북아시대의 구상은 한미 FTA 직후부터 좌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내년 **대선**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5.31 지방선거는 열우당의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노무현에겐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이라는 과제만이 남게 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들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북한카드**일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김정일의 서울방문이 성사되거나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어떤 형태로든 풀릴 가능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노무현으로서야 불리한 대선 국면을 반전시킬 소재가 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대선의 결과야 어찌됐든 결국, **남한을 전략기지로 삼아 북한을 정치경제적 영향 하에 편입시키고 사실상 지배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인 이상 남북의 화해무드 그 자체는 손해 볼 거 없는 장사지요.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상품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미국의 한국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국의 태도가 변수**일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도 어쨌거나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아래 두려 할테니까요. 북한 역시 그리 녹록하게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이 발빠르게 중국을 두번씩이나 시찰하고 온 건 일종의 시위였거.

어쨌건 문제는 노무현이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약속이(있었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겪어보면서, 이 땅의 진보와 평화 세력들에게 **정권교체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됐으니까요. 만약 노무현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딜을 했다면 그 자체로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사회의 진보와 평화를 책임져야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부터, 그리고 한미FTA에 올인하기 위해 결국 한미동맹과, 보수우익지배집단들과 실질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지금, 노무현정권은 이미 이땅 보통 대중들을 적으로 만든 것이니까여.

#. Sequence 3 / 한미FTA 그 후

사실 현재의 비판적인 학자들도 한미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계량화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기 때문
이어서가 아니라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충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항이래 가장 큰 규모의..” 심지어는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라는 수사를 동원할 정도입니다.

정부 역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
한 근거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효과>
라는 논문에서조차 희망적인 수치는 GDP가 0.42~1.99%, 금액으론 25억~135
억달러, 증가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같은 도표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흑
자는 42억달러에서 51억달러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가 “미국과 FTA를 맺으면 뭐가 어느만큼 좋다고 해야합니까?” 라고
FTA 실무자에게 묻자 “그게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
고 했다는 <서울경제>의 보도는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무서운 코미디
지요.

이해영교수가, 이미 제출된 효과분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도표로
가득한 분석과정은 생략하구여^^*)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등의 전망이 도출됩니다.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해도 결국 한국의 4대재
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미FTA와 양극화를 다잡겠다는 노무현의 공
언이 얼마나 허구이며 자기환상에 빠진 궤변인가를 말해줍니다. 오히려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우리사회 전분야에 걸쳐 확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설
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우기 미국은 한미FTA를 자신들의 스탠다드를 강요하고 충족시켜줄 가장
‘모범적인’ FTA 사례로 만들려는 의도를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도

로 전문화된 139명의 미국협상단을 친미 일변도인 한국의 10명 협상단이 상대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전문가도 아닌 미국유학생출신의 변호사 김현중입니다. 게임끝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수조정은 다 끝났고, 체결의 시기와 모양새만 고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연히 한미FTA는 좌절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설사 FTA 자체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다른' FTA여야 합니다. (이해영교수)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일방주의적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유독 미국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설명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FTA는, 스크린쿼터를 학살하고, 광우병소고기를 개방하고, 약가책정기준을 무력화하고, 배출가스규제를 무력화하고, 국민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해관철과 노무현의 야심이 결합하고, 권토중래를 노리는 보수 우익승미집단들이 찬가를 부르는 지금의 한미FTA는, 결단코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보통국민대중들, 그리고 우리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싸움입니다. 노무현의 위험한 도박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맡겨 둘 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제 이 글 전체의 에필로그로 갑니다..

Epilogue - 새로운 시작, 승리를 위해.

싸움은 이제 시작이므로 결론을 내릴 순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 전술의 문제도 여기서 결론 내릴 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광범위한 연대, 그리고 부문별 싸움들, 그리고 곧 조직될 범국민운동본부의 형식적, 내용적 수준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방향은 잡아야겠져.

단기적으론 당연히 **한미FTA를 좌절**시키는 것이 싸움의 목표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질적 내용과 지향점은..

신자유주의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미FTA는 대세, 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라는 거져. 언론의 의식화가 얼마나 오래동안 치밀하게 이루어져왔는 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개방이 대세라는 말.. 조심해야합니다. 물론, 본원적 의미에서 이제 세계는 세계화,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우린 같은 유행을 소비하고 있져.. 그러나 FTA를 통해 구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독점자본들의 잔치판일 뿐입니다.

정부는 독점자본들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독점자본의 재화들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세계화' 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양극화는 나타나고 있고, 결국 **국경을 넘고 인종을 초월하는 독점자본의 전횡아래 역시 국경을 넘고 인종을 초월하는 절대다수의 피폐된 민중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활약하는 소위 전쟁산업 자본들이 저지르는 무책임한 학살과 문명파괴의 행동들은 극적인 증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땅의 평화, 진보세력들은 정권교체를 지상의 과제로

여겼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진보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통해 그것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져.

그러나, 이제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제는 자본과 반자본의 싸움입니다. 전쟁과 반전쟁의 싸움입니다.**

그를 위해 **세계의 대중들과 연대**해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연대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찌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를 살았다는 행운의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좁게는 국내의 모든 반자본의 세력들과 연대하고, 넓게는 국외의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라는 좁은 틀 속에서 살아온 삶을 좀 더 넓은 지평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영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에서, 우리 영화인들, 특히, 배우나 감독들은 매우 상징적인 존재들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마틴 스톨세지가 우리에게 보낸 지지서한 하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문하는 대추리의 주민들은 우리로부터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기 쉬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연대의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우리 영화를 만드는 시간들을 방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 사회의 운동은 이 지점을 향하여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서 찾아지겠지요. 그때까지 모두들 굳건히 건강하시길!!!

2006년 03월. 한국영화감독조합 D.G.K

영화 문화의 다양성,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

- 스크린쿼터제의 한계를 보완할 영화 상영 시장 정책에 대한 제언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지난 1월 노무현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시행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50% 축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했다. 한국 영화 산업은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더라도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었고, 세계화 시대인데 한국영화는 왜 국제적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다소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세는 스크린쿼터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기에 스크린쿼터제의 존재는 영화 산업의 안전판이라는 이야기도, 연간 제작되는 한국영화의 제작비를 다 더해도 할리우드 영화 <킹콩> 한 편 정도일 뿐이며 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할리우드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국제 경쟁력에 대한 지표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왔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 중에 조금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있었다. 바로 '스크린쿼터제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야기인즉슨 '스크린쿼터제가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가문의 위기>나 <투사부일체> 같은 조폭 코미디영화의 흥행에만 도움이 되어 온 것이 아니냐'란 문제제기다. 스크린쿼터제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주류 산업의 오락적 영화에만 돌아갈 뿐 독립영화나 저예산의 예술영화들에게 상영 기회를 부여하고 있진 못하기에 스크린쿼터제가 지킨다는 문화 다양성이 실제로 담보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스크린쿼터제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란 것이다.

'한국 영화 상영 시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란 관점의 접근은 현재 영화 상영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취해야할 태도이며 적절한 주제이긴 하나, '한국 영화 상영 시장의 다양성 훼손이 스크린쿼터제의 무용성의 근거가 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재 상영 시장에 대한 해석으로는 무리가 있다. 이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스크린쿼터제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국가 간 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문화도 서비스 산업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자유 무역의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반대하는 제도이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는 산업이 아니기에 교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교류의 대상이다'는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하면,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드러낼 문화는 신자유주의적 통상의 논리로 다뤄져서는 안되며,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정책이 바로 스크린쿼터제인 것이다. 지난 해 유네스코에서 통과된 문화 다양성 협약 역시 이런 내용이다. 이 문화 다양성 협약의 체결에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성공적 정착과

이를 통한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가 다루고 있는 문화 다양성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스크린쿼터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스크린쿼터제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무리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자국 내의 영화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다. 국가 간 문화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는 상황만으로는 국내 영화 문화 다양성의 확대를 획득해 낼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자국 내의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식이 될 것이다.

한국 영화 문화 다양성의 위기는 무엇 때문일까?

지금 여기 한국 영화 문화 다양성의 위기가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영화 산업의 급속하게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금융 자본의 영화 제작 투자와 2000년 들어 가시화된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등장, 그리고 영화제작사들의 코스닥 상장의 노력은 한국 영화를 산업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한국 영화산업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화 시켜 영화 시장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속화시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의 유통 환경이 작품의 내적 의미보다 관객동원수와 박스오피스 수익에 종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영화는 하나의 예술 장르이기도 하지만 대규모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산업 모델에 근거한다. 이것이 다른 문학/연극/공연 등의 예술과 영화의 다른 측면이다. 영화 산업 모델의 경제적인 부분은 현대 사회 산업 모델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에 부합하는데, 영화의 제작은 생산에, 배급 부문은 도매에, 그리고 상영 부문은 소매에 각각 상응된다. 그러기에 주류 영화 산업의 일차적인 목적과 가치가 일반적인 산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이라는 점은 일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이 흥행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판매 촉진을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영화 상품의 흥행 성공은 마케팅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영화는 주문되어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며, 완성된 영화의 흥행 성공은 누구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영화 상품의 수요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메이저 제작사들은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게 된다. 제작과 배급을 수직계열화와 과점적 질서의 구축, 그리고 시장의 통제력을 얻기 위한 시도로 제한적 교역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수요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이것지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의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다양할 수 없으며, 배급되는 영화 역시 다양할 수 없다.

최근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들이 〈투사부일체〉, 〈구세주〉 같은 영화로 채워지는 것은 영화산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기존의 성공작을 모방하는 영화 산업의 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영화의 등장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도는 스타 시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 홍상수 감독과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국제적으로 성공하였지만 국내에서 안정적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과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이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산업의 속성 때문인 것이다.

영화 성공의 불확실성은 단지 제작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영 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 영화 상영 방식은 단관 장기 상영 방식이었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는 단성사 1관에서 장기상영을 통해 1백만명의 관객을 동원시켰다. 그러나 영화 제작비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관 장기 상영의 방식은 다관 단기 상영의 방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속칭 와이드 릴리즈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은 개봉 전 엄청난 홍보를 통해 관객들의 기대감을 자극시키고 영화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이전 개봉 첫 주 많은 스크린을 확보해 단번에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모으는 상영 방식이다. 영화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이 나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함과 흥행 순위 1위라는 프리미엄을 획득해 볼만한 영화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고자 함이 이 상영 방식의 목표다. 이런 상영 방식의 변화는 최근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의 활발한 설립이라는 상영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영화 상영 시장을 점차 규모의 경제가 통하는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큰 제작비와 막대한 마케팅비를 들인 메이저 배급사들의 영화는 많은 스크린을 점유하게 되고,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영화들의 상영 배급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게 된다.

영화 산업의 성장을 산업적 속성에만 온전히 맡겨버린다면 이런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주류 영화관에서의 선택의 범위는 다른 시장의 조건 하에서보다 넓지 못하게 될 것이며, 스크린의 증가는 반드시 관객을 위한 영화의 보다 많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은 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의 장소를 의미하게 될 뿐이다.

이런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영화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산업 성장을 위한 부양책만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영화 산업이 21세기형 신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략산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산업만을 지원한다면 절대 영화 문화의 다양성은 획득될 수 없을 것이다.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예술로서 영화를 사고할 수 있는 비영리적이고 공공적인 영역들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갈 때 비로소 영화 문화의 다양성이 제대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영화 문화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양한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런 환경은 단순히 저예산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제작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조성될 수 없다.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영화 상영 시장에서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는 상영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한다.

한국 독립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는 것은 영화를 상영할 스크린이 없어서는 아니다. 2005년 한국 극장의 스크린 수가 1550여개였고, 올해는 200여개 정도가 늘어나 1800여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매년 스크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스크린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많은 수의 극장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많은 스크린들이 몇 몇 영화에 의해 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배급의 수직계열화도 스크린 과점의 한 요소이긴 하나, 영화 콘텐츠의 속성 상 수직 계열화에 의해서만 스크린의 과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의 과점 현상은 많은 수익 발생이 가능한 영화들에만 스크린을 몰아주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행 기대작들이 대거 몰려 개봉하는 여름과 겨울 방학 때는 상영되는 영화의 편수가 15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막힌 현상들이 발생한다. 몇 개의 흥행 기대작들이 스크린을 과점하는 현상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흥행성이 떨어지는 영화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 문화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스크린의 과점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몇 가지 방안들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너쿼터제이다. 마이너쿼터제는 스크린쿼터제가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속에서 스크린쿼터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다양한 영화의 상영일수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제도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진 적은 없지만, 비주류 영화에 일정한 상영 일수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는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정책과 맞물려 제안되었다는 문제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토론되어 지지 못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쿼터제가 담보하지 못하는 영화 다양성을 위해 마이너쿼터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마이너쿼터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왔다. 전국 1500여개에 달하는 스크린에 일괄적으로 마이너쿼터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의미 있는 일수를 확보하지 못한 쿼터제는 제도의 도입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너쿼터 일수를 146일의 스크린쿼터제의 10%로 적용한다면 약 14일 가량이 된다. 14일은 딱 2주가 되는데, 극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14일만 예술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 1~2주의 연속성을 가진다면 그나마 의미 있는 상영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1일씩 14회 상영하는 방식이 된다면 그 제도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이 된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규제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강제성과 구체적인 규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효용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스크린쿼터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금은 없어진 교호 상영제도¹⁾ 역시 규제책이었으나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아 실효를 상실하고 폐지되었다.

무엇보다 마이너쿼터제의 도입이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이 제도를 검토한 열린우리당이

마이너쿼터가 적용된 일 수 만큼 극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1500개 스크린에 모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그 보조금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실효도 없을 제도를 위해 상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한 지원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검토되는 대안은 영화의 프린트 복사 벌 수 제한이다. 과도한 스크린점유를 막기 위해 최대 복사하는 프린트 벌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풍> 같은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5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린트 벌수를 300벌 정도로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현재의 상영 시장 안에서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제도가 될지는 의문이다. 1차적으로 멀티플렉스 극장의 경우 1개의 필름으로도 여러 스크린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단순히 프린트 벌수가 제한된다고 해서 상영되는 스크린 수가 줄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제한되는 프린트 수가 영화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것이다. 300벌로 프린트 벌수가 제한된다면, 흥행 기대작을 다수 보유한 메이저 배급사에 대한 극장들의 줄서기가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제한된 프린트벌수가 영화 상영 시장의 다양성을 가져오기 보다는 배급사의 시장 장악력을 확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제작-배급-상영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급사들은 자사의 흥행기대작들은 자사의 관계사가 가진 스크린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머지 프린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립 극장들은 배급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진다. 자연스레 블록 부킹 등이 횡행하게 될 것이며, 좋은 배급라인을 타지 못한 극장들의 상영관 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영 시장의 다양한 작품의 상영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상영관 정책은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전체 상영 시장에서 점유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멀티플렉스에 대해서는 상영 프로그램 쿼터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한 멀티플렉스 체인²⁾의 시장 점유율이 총 43.4%³⁾를 넘어서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극장들을 대상으로 상영 프로그램 쿼터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영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기존 멀티플렉스의 스크린에서 보다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상영 프로그램 쿼터제의 도입은 또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의 시장 지배력을 일정하게 상쇄하여 영화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적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공공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상영 시장에 대한 정책 개입만으로 영화 문화의 다양성이 온전히 확보될 수는 없다. 기존 상영 시장의 극장들을 기본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하는 극장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모든 영화들이 수용 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리적 목적을 가진 영화들은 기존 극장 제도 내에 적극적으로 수용 되겠지만, 비영리적인 영화들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

영화가 산업 모델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영화들이 산업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의 예술적 미학적 측면 강조하는 영화들이나, 고전 영화들, 동성애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 그리고 사회참여적인 영화들도 존재한다. 이런 비영리적인 영화들의 존재가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종종 쉽게 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극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영리적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극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시네마테크인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있긴 하지만 이 극장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시장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독립영화의 경우, 주류영화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저예산영화나 주류 영화 산업의 외곽에서 만들어지는 저예산 예술영화와 달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류 산업 영화 제작비의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경우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상영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장편독립영화의 제작이 활성화되고, 여러 지원 제도들을 통해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지만, 개봉되는 영화들은 제작편수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영화들은 영화제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상영되어 질뿐이다. 운 좋게 상영 시장에서 상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1~2개 정도의 스크린에서 1~2주 정도 상영될 뿐이다.

독립영화도 기존 영화 상영 시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시장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지만, 모든 영화들에게 영리적 목적이 강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상영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영화의 미학적 예술적 측면 등 비영리적인 영화의 속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영리적 영화들의 상영을 위해서는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영관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다른 방식으로 상영작품을 선정하고, 수익으로만 관객을 상정하지 않는 공공적 성격의 상영관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 상영 영역의 확대는 상영 시장이 수익성을 이유로 선택하지 않은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교류하고, 영화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주제들을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독립영화 진영은 독립영화의 상영을 위해 독립영화의 전용 상영관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사회 참여적이고 예술지향적인 성격이 강해 쉽게 기존 상영 시장에서 소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류 산업 영화와 다른 매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⁴⁾ 기존 상영 시장에서 쉽게 상영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요구는 제대로 영화진흥정책에 반영되어오지 못했다. 이는 영화 진흥 정책이 산업 중심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바라본 독립영화는 그 자체의 존재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영화 산업의 인력 충원을 위한 장으로 받아들여지며, 독립 영화의 제작은 큰 규모의 영화를 만들기 위한 수련 과정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비영리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그 자체의 문화적 의미로 평가하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때, 단순히 시장 상황 안에서의 다양성을 넘어 제대로 된 영화 문화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문화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만은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문화 다양성의 확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양책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문화 다양성 정책들은 그저 구호로만 그쳐 버릴 것이다.

-
- 1) 교호(交互)상영제는 한국영화 상영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외국영화와 한국영화를 번갈아 상영해야 한다는 제도였다. 그러나 극장 측에서 외국영화 개봉 상영 이후 한국영화를 1일 상영하고 다시 외국영화를 개봉 상영하는 방식 등으로 교묘하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결국엔 실효성을 잃고 폐지되었다.
 - 2) 2004년 기준으로 CGV의 스크린점유율은 22.0%(프리머스 체인의 8.1% 포함), 롯데시네마의 점유율은 6.3%, 메가박스의 경우 6.8%로 전체 스크린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각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전체 스크린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린 점유율은 류형진 외, <멀티플렉스 산업 연구>(영화진흥위원회, 2005) p63.
 - 3) 2004년 기준, CGV의 시장점유율은 27.7%(프리머스 체인의 10.7% 포함), 롯데시네마의 점유율은 7.5%, 메가박스의 점유율은 8.2%이다. 류형진 외, 앞의 책.
 - 4) 주류 산업에서 생산하는 영화는 35mm 필름 포맷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독립영화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35mm 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제작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독립영화의 경우, 과거엔 주로 16mm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어왔고, 현재는 디지털 비디오로 주로 제작되고 있다.